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교육(2024. 10. 21)

주제 : 지방대학, 평생교육에 반하다

장소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대강의실

RISE 정책사업과 평생교육 차원의 대응방안

고 석 규(전 국립목포대 총장, 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CONTENTS

1부 : 모두의 평생학습

1. 문명의 대전환 속에서
2. 존재하기 위한 학습
3.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정책
4.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2부 : RISE 사업

1. RISE 사업이란?
2.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I
3.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II
4.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I
5.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II

3부 : RISE 사업과 평생교육 차원의 대응

1.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
 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4. RISE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5. 마무리 말
-

1부



모두의 평생학습

1. 문명의 대전환 속에서

기하급수적 변화, 지식의 폭발적 증가

2022년 11월 18일,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계(SI)에 31년만에

기존 국제단위계의 십진 배수와 분수에

4개의 새로운 접두어를 도입하기로 결정.

10의 27승 론나(ronna), 10의 30승 퀘타(quetta)

10의 -27승 론토(ronto), 10의 -30승 퀘cto(quecto)

“데이터 급증에 기존 표현으로 한계”

01

문명의 대전환

10^{30}	퀘타(quetta)	Q
10^{27}	론나(ronna)	R

극단적인 수의 단위 Extreme Figures

10^{-27}	론토(ronto)	r
10^{-30}	퀵토(quetto)	q

인자	접두어	기호	배수	십진수
10^{24}	요타(yota)	Y	자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21}	제타(zeta)	Z	십해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18}	엑사(exa)	E	백경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15}	페타(peta)	P	천조	1 000 000 000 000 000
10^{12}	테라(tera)	T	조	1 000 000 000 000
10^9	기가(giga)	G	십억	1 000 000 000
10^6	메가(mega)	M	백만	1 000 000
10^3	킬로(kilo)	K	천	1 000
10^2	헥토(hecto)	H	백	100
10	데카(deca)	Da	십	10
1			일	1
10^{-1}	데시(decy)	d	십분의 일	0.1
10^{-2}	센티(centi)	c	백분의 일	0.01
10^{-3}	밀리(milli)	m	천분의 일	0.001
10^{-6}	마이크로(micro)	μ	백만분의 일	0.000 001
10^{-9}	나노(nano)	n	십억분의 일	0.000 000 001
10^{-12}	피코(pico)	p	일조분의 일	0.000 000 000 001
10^{-15}	펨토(femto)	f	천조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1
10^{-18}	아토(atto)	a	백경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0 001
10^{-21}	젠티(jebto)	z	십해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0 000 001
10^{-24}	옥토(yogto)	y	일자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 데이터 단위 =

단위	정의	저장공간 크기
비트(bit)	0 또는 1	예 / 아니오
1바이트(Byte)	8 bit	알파벳과 숫자 한 개
1킬로바이트(KB)	1,024 Byte	몇 개의 문단
1메가바이트(MB)	1,024 KB	1분 길이의 MP3 노래
1기가바이트(GB)	1,024 MB	30분 길이의 HD 영화
1테라바이트(TB)	1,024 GB	약 200편의 FHD 영화

AI_chatGPT 열풍, 공공기관의 이슈리포트

SERVICE DESIGN 2023. 4. 6.



202111_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_국가인권위원회.pdf



202301_ChatGPT 현황과 저작권이슈_보고서_한국저작권위원회.pdf



202301_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_ChatGPT활용사례 및 전망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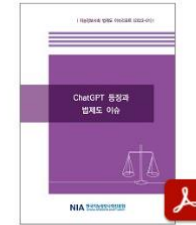
202301_ChatGPT와 생성 AI가 가져올 문화예술의 미래_한국문화정보원_김태원.pdf



202301_KAA_journal_chatGPT가 검색엔진과 콘텐츠 마케팅에 미칠 영향_이준원.pdf



202301_가짜 데이터가 만드는 진짜 인공지능 시대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pdf



202301_법제도 이슈리포트_ChatGPT의 등장과 법제도 이슈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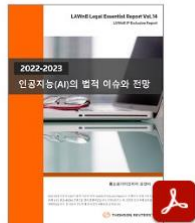
202301_챗GPT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_DGB금융그룹.pdf



202302_SW중심사회104호_2월호 중 AI관련란 발췌_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pdf



202302_산업기술 동향워치_생성형 AI의 가능성과 관리 방안 등_한국산업기술진흥원.pdf



202302_인공지능의 법적 이슈와 전망_토스논리터코리아 로앤비.pdf



202302_초거대 AI 모델 관련 법적 이슈_법무법인화우.pdf



202303_AI리포트 인공지능 솔루션 현황을 통해 살펴본 일상속의 인공지능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_오연주...



202303_chatGPT 기회인가 위기인가_삼일PwC_insight.pdf



202303_SPRi_AI특집_GPT-4 개요 및 특징_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pdf



202303_SW중심사회105호_3월호 중 AI관련란 발췌_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pdf



202303_거대언어모델 LLM_대형 언어 모델이란_경남 ICT협회 AI연구회.pdf



202303_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과제 (ChatGPT)_자본시장연구원.pdf



202303_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 활용과 정책적 함의_경북연구원.pdf



202303_이슈리포트 업무 활용편_ChatGPT 활용사례 및 활용 팁_서울디지털재단.pdf



202303_이슈리포트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LLM)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화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03_이슈와논점_2067호_챗GPT의 등장과 인공지능 분야의 과제_국회입법조사처.pdf



202303_인공지능에 관한 새로운 챕터의 시작_한국인터넷기업협회.pdf



202304_UNESCO NEWS_04_챗GPT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_유네스코한국위원회.pdf



202304_챗GPT 이용 경험 및 인식_챗GPT 이용 경험 및 인식 조사_한국언론진흥재단_양정애.pdf



20230227_이슈리포트158_초거대언어모델의 부상과 주요이슈_ChatGPT의 기술적 특징과 사회적_산업적 ...



20230321_이슈리포트157_국내외 공공부문 AI 활용현황 분석 및 시사점_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pdf

그런데 ...

서울대학교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GLP)

“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읽는다
”

제44기 Global Leadership Program

모집인원 45명 내외

모집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4월 초 (수시모집)

지원방법 전화 및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지원서 신청

교육기간 2024년 4월 말 ~ 11월 말

지원자격

- 기업체 최고경영자, 임원 및 벤처기업인, 국회의원, 군장성, 정부기관 및 공공기업체 고위 책임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 사회 각 분야의 고위 지도자, 기타 주요 기관의 기관장 및 간부급 인사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경영자 인사이드 투어 프로그램
- 국내외 워크숍
- 친교활동(골프, 등산, 학술·문화활동 등)
- 졸업원우와의 만남의 장

특 전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회원자격 부여
- 원우자녀 진로자문 등
- 서울대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서울대 GLP총동창회 가입 및 활동

주요 교육내용

- Course 1.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과 리더십
- Course 2. 세계 지역별 트렌드 분석과 마케팅 전략
- Course 3. 글로벌 경영전략
- Course 4. 환경과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 Course 5. 글로벌 리더를 위한 교양 강좌

문의 및 접수

- 입학상담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40동 202호 GLP 사무국
-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20분 ~ 9시 20분
- 강의장소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
- 연 락 처 : Tel (02)880-9250, HP: 010-2032-7831
- 홈페이지 : glp.snu.ac.kr ● 이 메 일 : glpsnu@snu.ac.k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평생학습의 기회마저 지극히 불평등

-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심각.
- 평생학습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은 50%,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
-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38%로, 50%를 상회하는 스위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출처] 채창균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혁신」,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포럼』 360

평생교육기회의 평등성 제공이 시급

미래의 자화상 : 이중적 시장구조와 양극화

이중적 시장구조가 모든 구직 시장에 확산될 것으로 예측

- 상위 15%의 초생산적 인력이 있고, 그 밑에 얇은 서비스 계층이 있어 꽤 높은 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남은 대다수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이 대체해 버려 일감이 사라지고,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저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될 것.
- 상위 15%의 초생산적 인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고, 나머지 대다수는 훨씬 가난해진다는 뜻이다.
- 이미 양극화된 우리 사회가 더욱 양극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이다.

결국 중간은 없다는 뜻이 된다. 중산층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멈추지 못할 겁니다. 조만간 우리는 두 부류의 국민으로 나뉘어 갈 겁니다. 역동적인 기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그밖의 나머지 사람들로”

평균실증



이제 중간은 없다! 양극화, N극화, 파편화의 시대

2023 10대 트렌드 키워드

평균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사고, 대다수 소비자들이 찾는 무난한 상품으로는 이제 어디에도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는 사람들은 점점 지갑을 여는 데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시장은 양극화, N극화, 파편화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2023년, 어떤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할지 전망해본다.

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TREND KEYWORD #1

극과 극 소비와 승자독식

‘평균 실증’ 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평균, 기준,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정치, 사회 분야로 확산되고 갈등과 분열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소비 역시 극과 극을 넘나들고 시장은 ‘승자독식’으로 굳혀지고 있다.

2. 존재하기 위한 학습

-평생학습-

1972년 유네스코

〈Learning to Be: 존재하기 위한 학습〉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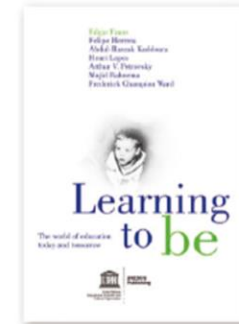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갈 사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교육의 역할에 관한) 이 변화는 과거 사회들의 상대적 안정성과 현대 세계의 급속한 발전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은 교육자들에게 열심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Faure et al., 1972, Learning to Be, p. 13)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교육이 낡은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어떻게든 변해야 한다

이처럼 평생학습은 이미 1972년에 제시된 견해

포르 보고서

존재하기 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 위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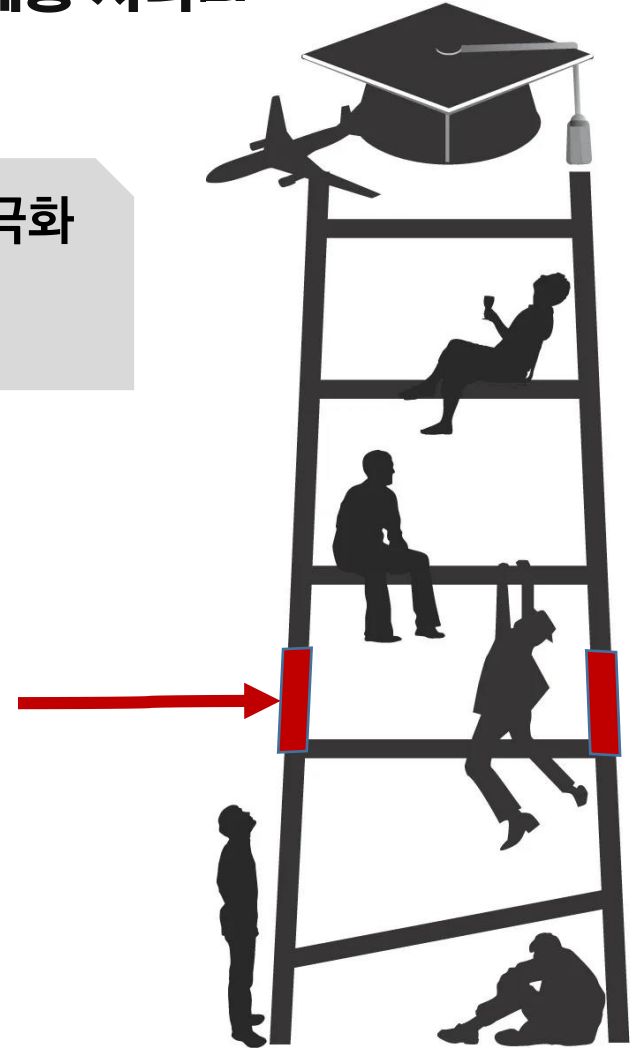
에드가르 포르
펠리페 에레라
압둘-라자크 카두라
앙리 로페즈
안디우 페투르스키
나나
프레더릭 켐피언 워드

90년대생 불평등 보고서
불평등 순환고리 끊으려면... “일자리 격차 해소... ‘계층 사다리’ 만들어야”

2019.09.30 심윤지·조문희·이보라 기자, 경향신문

불평등 순환고리의 출발점인 교육, 교육에서 비롯된 양극화
 지금,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못함.
 그 간극은 평생에 걸쳐 더욱 벌어짐.

해결책은 있는가?
교육! 평생교육에서 답을 찾는다.



4차산업혁명 및 AI 등 미래의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 모든 세대에 필요한 시기, 그 중에서도 배움-일자리-삶이 선순환되는 평생직업교육이 필요

-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 디지털 대전환 및 신산업, 신기술분야 기술혁신과 미래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평생 학습의 중요성 증대
-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회생활 변화와 환경에 대응, 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 필요할 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기술, 사람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훈련의 비전을 제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지원

- 대학의 역할과 기능도 기존의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삶과 실생활 중심의 **평생직업교육**과정으로 진화
- 학습과 일자리 그리고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소로서 대학·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3.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정책

평생교육 정책 관련 법(2007년까지)

-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된 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1단계는 1945년~1970년대 '성인 기초교육 및 계속교육의 정착단계'로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학제가 수립되었다.
- 2단계는 1980년~2001년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구축단계'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방송통신대학,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등이 신설되었고,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공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 3단계는 2000년대~2007년 '평생교육·평생학습시대의 도래' 단계로 평생교육법(2000)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가 구축되었다.

2007년 평생교육법의 전부 개정

평생교육법[시행 2008. 2. 15.]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 평생교육추진체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 전문개정 이후 8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평생교육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와 체계가 제한적이어서 지식기반사회, 창조사회, 고령사회로 대변되는 시대상황을 포괄하여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되어 왔다.
-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체제 마련,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체제 정비, 새로운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법 규정 마련, 일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조문 정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이 추진되었다.

평생교육과 법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 시민권”**

헌법 제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평생교육은
헌법의 권리다!”**

보편적평생교육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평생학습 대전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이유

2022년 11월, 교육위원장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 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평생학습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2023년 11월)

- 지금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단지 법적 권리 여부를 떠나, 적응교육으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까지도 부여받아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이란 말이 당연하다고 여길 만큼 지금 우리는 집단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민이 평생교육 정책의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이처럼 크다. 이는 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 역할이 커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



어떻게 달라질까?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7영역 :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

4.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 평생교육법의 개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신·구 평생교육법 비교

구 평생교육법[시행 2021. 12. 9.]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2021. 6. 8.>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평생교육법[시행 2023. 12. 14.]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2021. 6. 8., 2023. 4. 18.>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4. 18.>
-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8.>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강화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기존안에서는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이었는데,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였다.
- 그리고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고 나아가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였다.
- 컨설팅과 더불어 조사·연구,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등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역할이 보다 구체화, 다양화되었다.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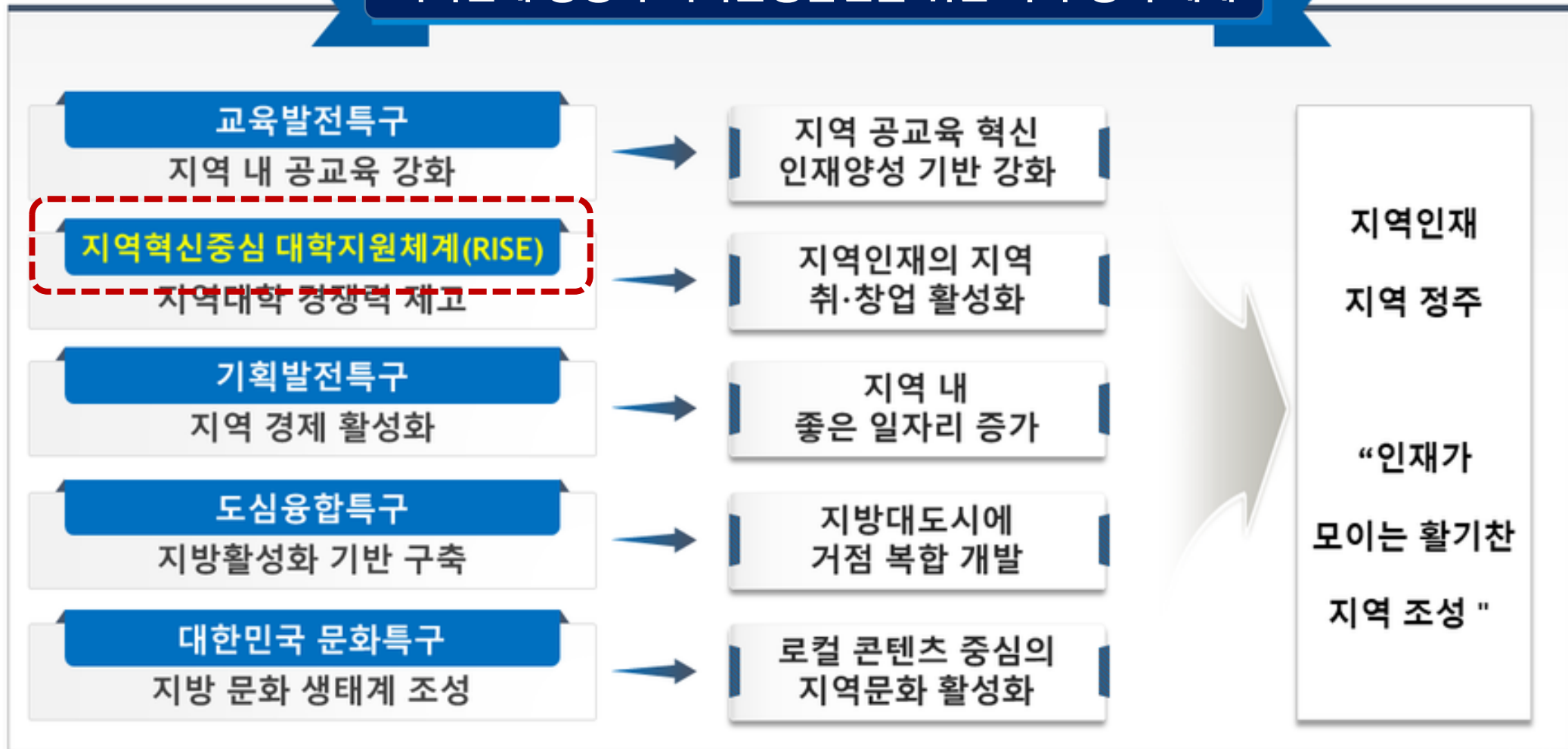


RISE 사업

-행정이 이끄는 대학교육의
불안한 미래-

1. RISE 사업이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이란?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이 혁신의 중심이 되는 대학지원체제로 해석

-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실시
-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hub)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

교육부 5대 대학재정지원사업

- 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3,420억 원,
- ②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5,512억 원,
- ③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510억 원,
- ④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900억 원,
- ⑤ 지방대학성화사업 2,500억 원(2023년 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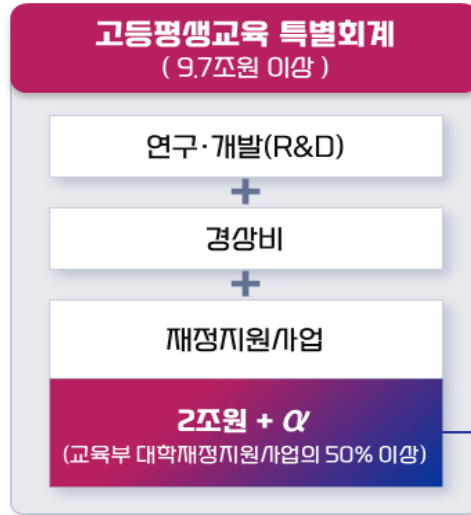
원칙적으로 폐지 및 재설계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RISE로 통합해 지원하고,
-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RISE로 전환.
-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목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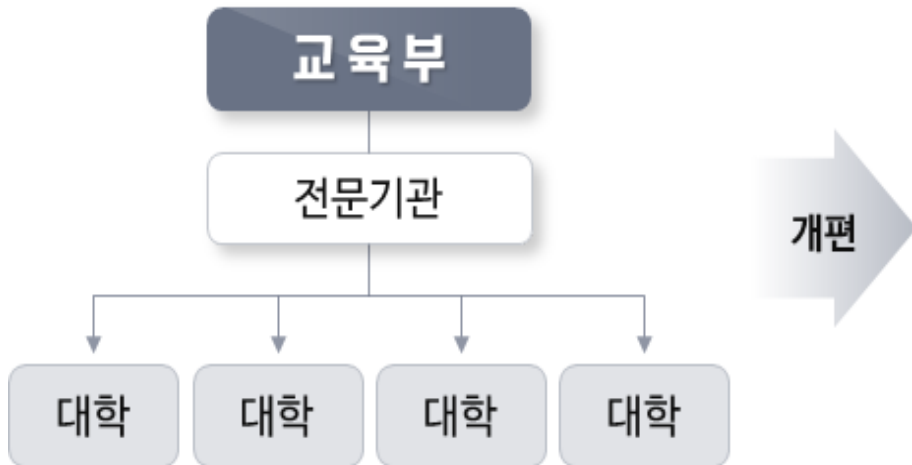
['25]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개편 방향]

RISE 통합 예산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개편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 변화

(기존)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방식

정부주도형 계획수립 및 지원(Top-Down)

중앙부처별 독립적·분절적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추진
(10개 부처 27개 사업 209억원)

교육부 5대 대학재정지원사업 분절적 추진

RIS/LINC3.0/HiVE/LiFE2.0/지방대활성화사업



(향후)RISE 체계 추진

지역주도형 계획 기반 정부지원(Bottom-up & Spread)

중앙부처별 연계·협업 사업운영
(RISE 계획과 연계·협업)

교육부 5대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지역사업간 통합운영 추진

RIS+LINC3.0+HiVE+LiFE2.0+지방대활성화+지자체사업 등 재구조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주요 내용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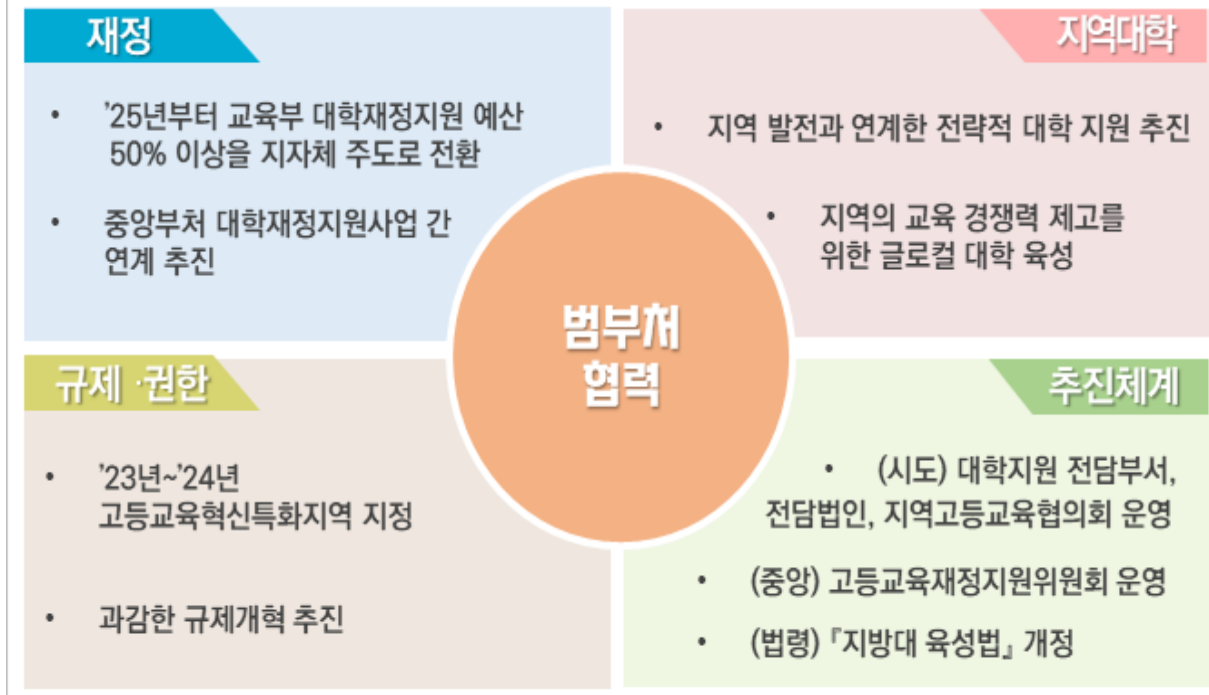
비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목표

“대학이 살리는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지역이 키우는 대학”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



정책여건

지원중심으로 교육부 역할 대전환

규제개혁 대학 자율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편

재정개혁 혁신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대학 지원

구조개혁 지역 사회를 위한 대학 역할 전환 지원

범정부적 지역주도 정책 강화

지역소멸 방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본격화

※ 일자리, 지역재생, 문화, 산업, R&D 등 전 분야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 육성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 선정

: 대구, 부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RISE 사업
추진 개요

01 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이양 본격 추진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23. 2.)에서 중앙정부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의 지방이양 추진 결정

- ✓ 추진목적 : 국토, 환경,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맞춤형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 교육 분야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대 지자체 협력 생태계 구축에 중점(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 (지역대학사업 개편) 지역사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유학생유치 포함)-산학협력-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 구축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역혁신 저해요소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 특례제도 비수도권 확산
 -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지자체 중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방안 마련 위원회 신설
 - (지역인재 투자협약) 초·중등 교육에서 고등교육-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역인재 육성체계 마련

분 야	자자체 이양 주요 과제
국토(12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
산업(22개)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 업종 등 변경 권한
고용(8개)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 집행 권한
교육(4개)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설립 승인권
복지(7개)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제도(4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구축

RISE 사업
추진 개요

0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교육부 사업 개편 방향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추진

- 1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RISE로 연계·통합 지자체 이관
☞ RIS, LINC 3.0, LIFE, HIVE,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지원

- 2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수요 기반 대학 지원
☞ 교육부-지자체 공동 설계(Co-Design)·조정을 통한 RISE 계획 수립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및 규제 완화

- 3 RISE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 및 규제특례 신속 지원
☞ 지방대학육성법 제22조에 따른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대학 규제 개혁

지역주도 대학지원체계 기반 마련

- 4 지역주도 대학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 운영 및 법령 제 개정
☞ (가칭)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신설, 지역 전담기관(RISE센터) 지정 및 운영

'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이상 **지자체 주도로** 전환
지역발전 중심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01 RISE 사업이란?

RISE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으로 지방소멸·대학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지역 정주가 궁극적 해결책


누가 정주
할 것인가?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취·창업을 통해 지역정주 유도 : 선취업·후진학 및 성인학습자 대상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LiFE사업


RISE사업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RISE사업 이후 교육부와 지자체의 역할 차이

 교육부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원**

- 첨단인재 양 성
- 학술진흥 연구개발
- 일반재정 지원

 전라남도 등 지자체

**지역 맞춤형
대학 연계 및 지원**

- 지역산업 교육혁신
- 산학협력 직업교육
- 대 학 평생교육

RISE사업이 교육부 사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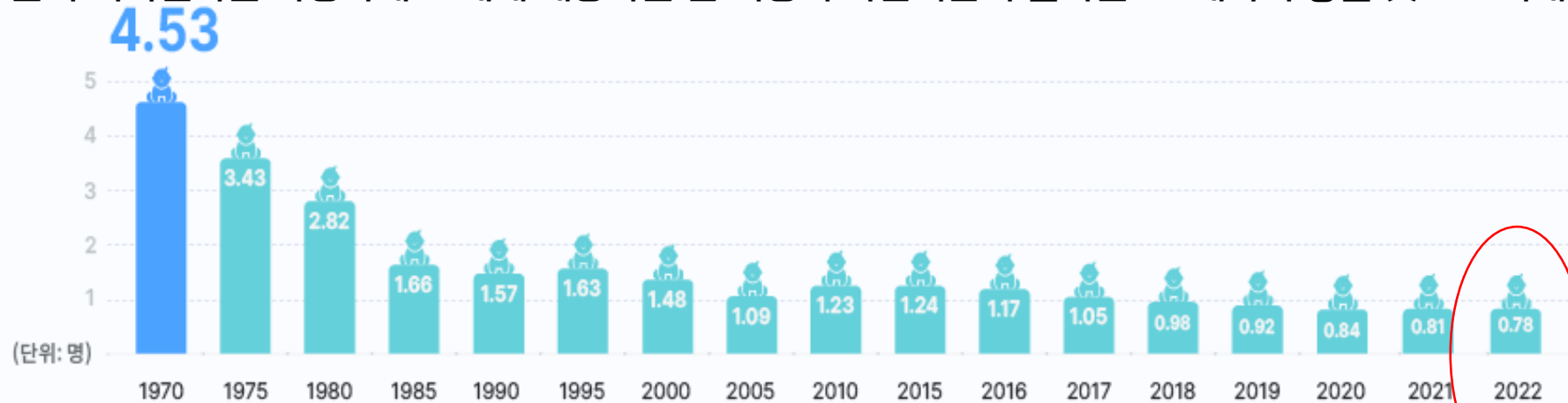
2.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I

-저출산·인구구조의 변화 : 대학의 위기-

저출산

합계출산율이란?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15세에 해당하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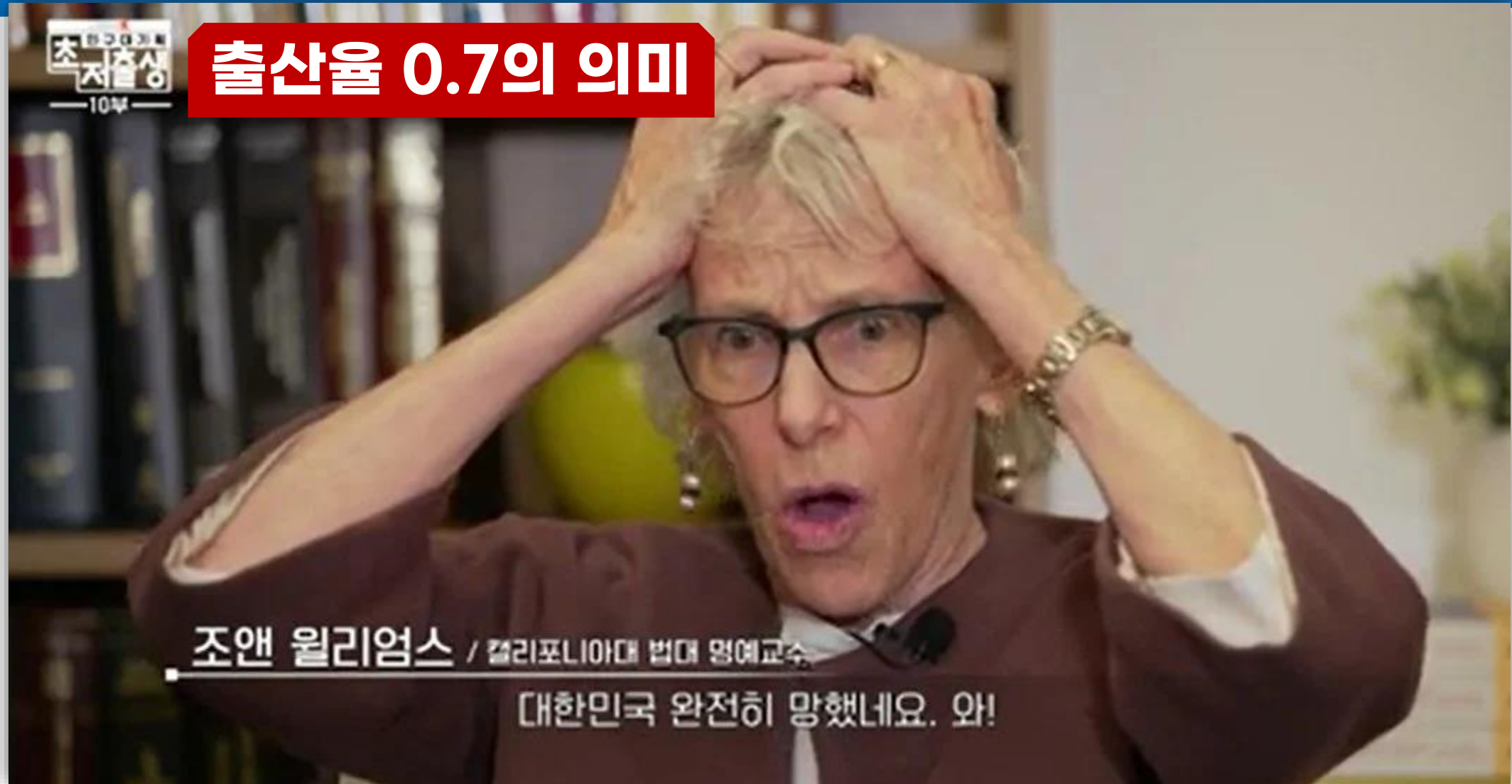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

2023년 출산율 0.72

2021년 주요국가
합계 출산율

- 출산율 1.0 이하는 한국이 유일





EBS 다큐멘터리 <초저출생>에 출연한 조안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한국 합계출산율을 듣고 놀라고 있다. ©EBS 다큐멘터리 화면 캡처

출산율 0.7의 의미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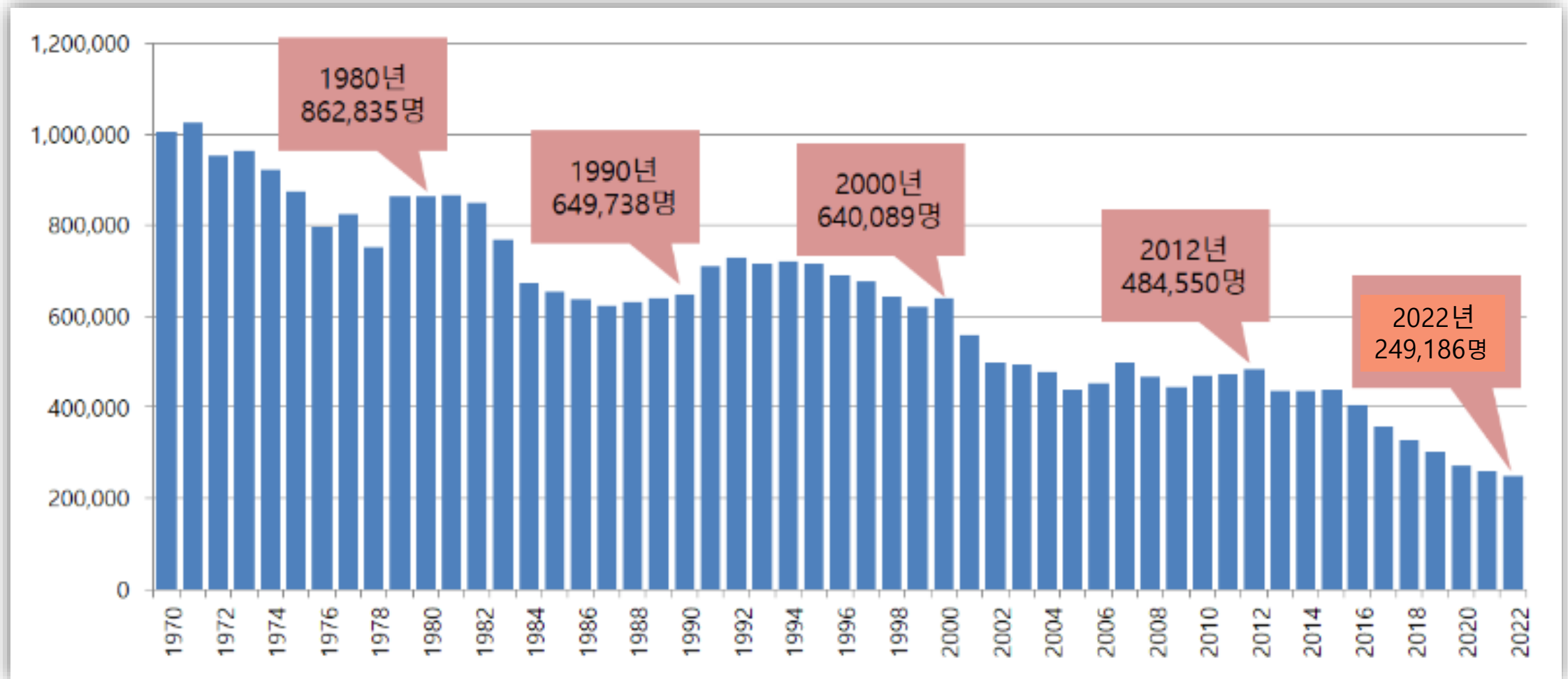
2024.06.19

-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에 지원 집중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 5세까지 무상 교육·보육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연도별 출생아 추이(197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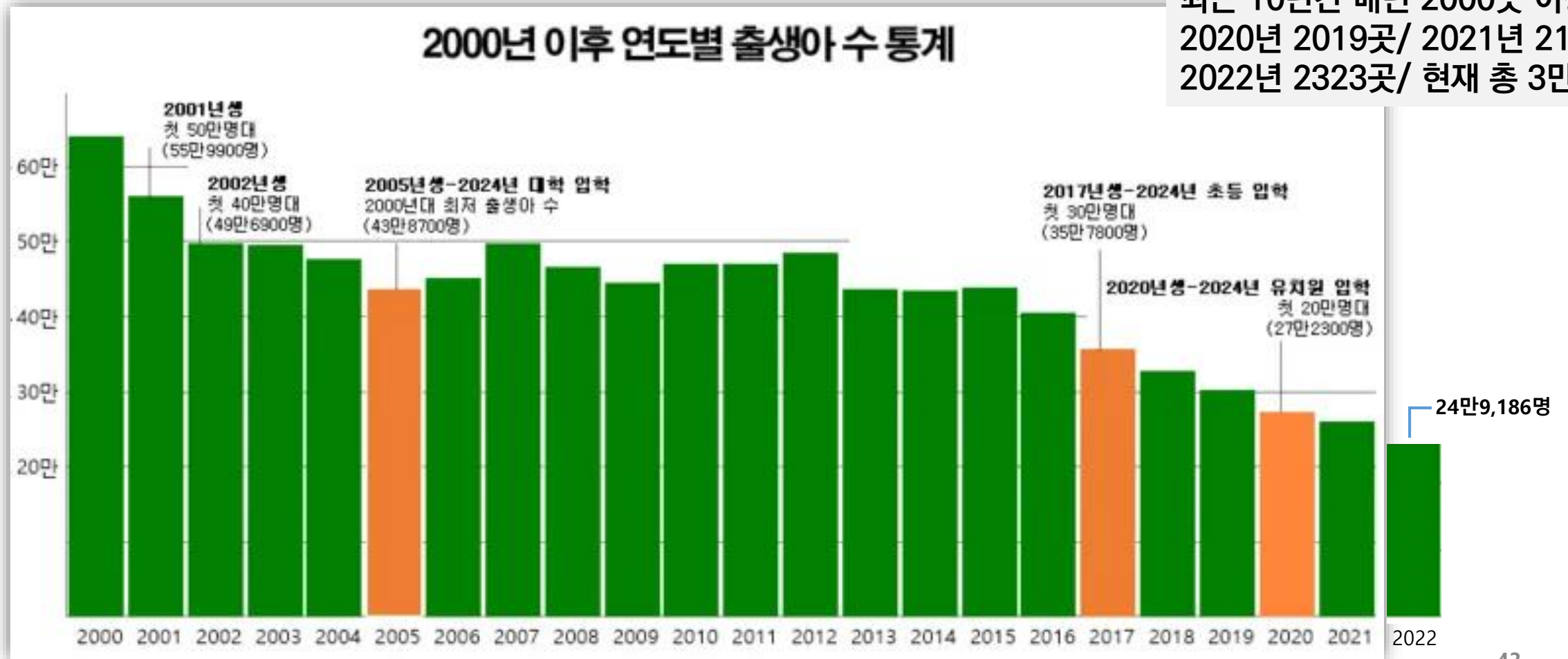


내년, 대학-초등학교-유치원에 '트리플 인구절벽' 온다

2023.01.23 16:40 경향신문 남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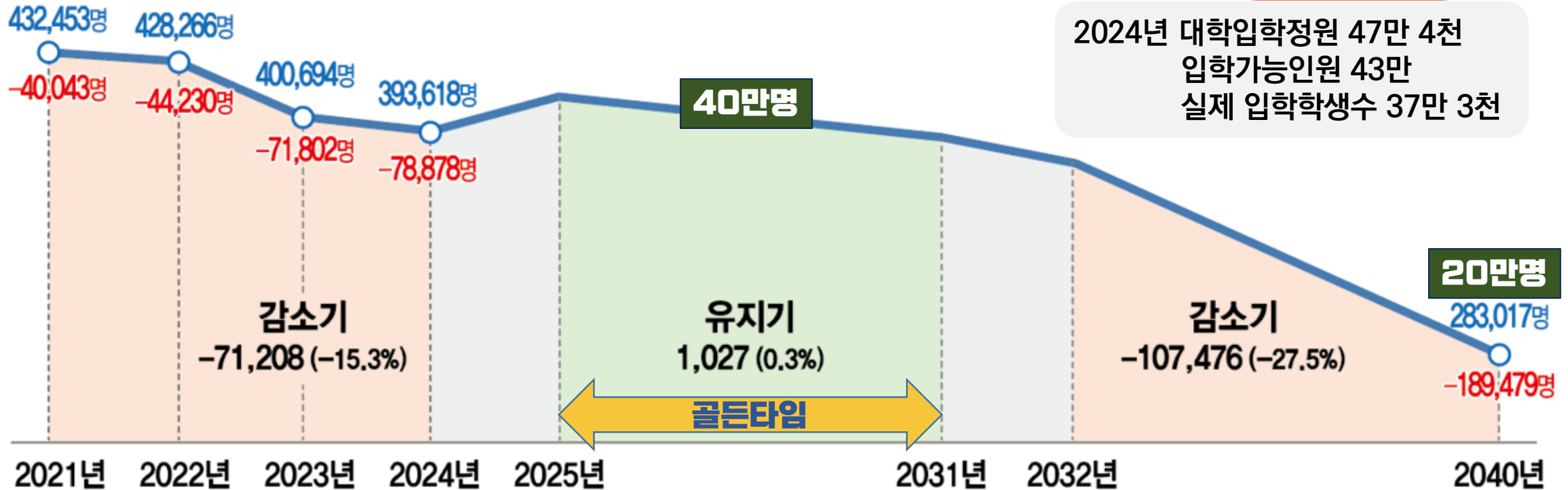
어린이집 폐업

최근 10년간 매년 2000곳 이상
2020년 2019곳/ 2021년 2106곳
2022년 2323곳/ 현재 총 3만여 곳



2021~2040 대학 입학가능인원 추계

그래픽_ 정연희



- ◎ 입학자원 급감 : 2030년 대학입학자원 40만명 수준에서 2040년 20만명 수준으로 급감
- ◎ 골든타임 :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대폭락기 대비 학사구조 정비의 골든타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 (2021.12)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

- 오는 2042년~2046년의 국내 대학 수를 190개로 예상
- 올해 국내 대학은 모두 385곳인데, 25년 뒤에는 거의 절반만 살아남는 셈.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31개 대학 중 44%인 146곳만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대학 생존율이 75% 이상인 곳은 서울과 세종뿐.
- 강원(43.5%), 대전(41.2%), 경북(37.1%), 부산(30.4%), 전북(30%) 등은 50%를 밑돌았고,
- 경남(21.7%)과 울산(20%), 전남(19%) 등은 5개 대학 중 1곳 정도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

대학 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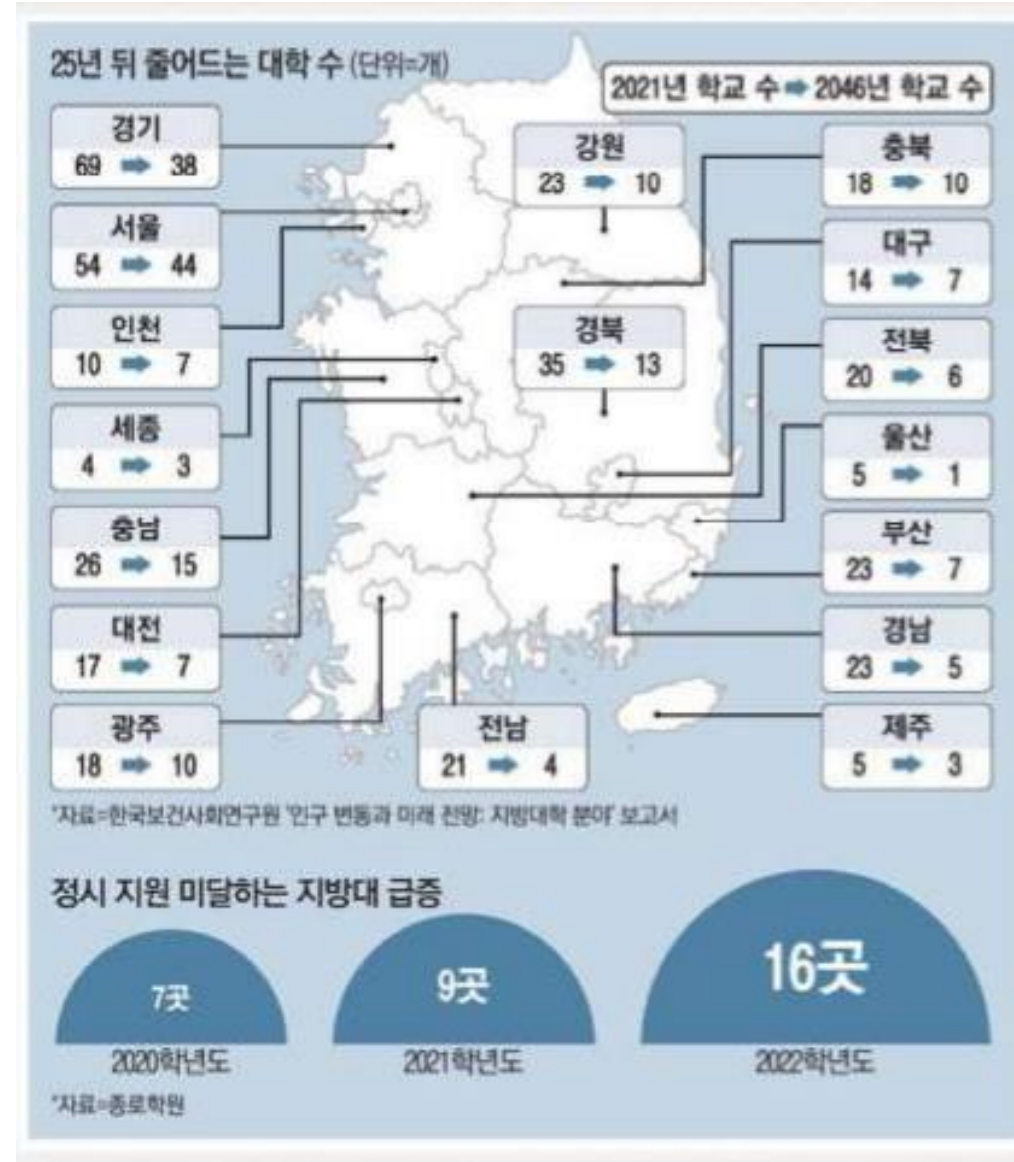
2046년 생존 예상 전북 대학 수
20 → 6

2046년 생존 예상 전남 대학 수
21 → 4

2042~2046 지역별 대학 생존율 (단위: %)



(출처: 동아대 이동규 교수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



3.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II

-지방소멸과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전남 지방소멸' 또 암울한 데이터 쏟아졌다

무등일보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산업연구원 보고서 '압도적 근절' ... 신안, 전국 첫번째

22곳 중 13곳 위험·우려군 분류
광역단체들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출산정책보다 유출부터 막아야



관내 22개 시·군 중 13곳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포함되는 등 전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압도적으로 지방소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출생률 등 인구 재생산 정책이 아닌, 인구 유출에 초점을 맞춰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기업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이전에 대한 파격적이고도 차등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국 시·군·구의 지방소멸 위험도를 총 6단계로 분류했다.

소멸위험지역(0.5 미만), 소멸우려지역(0.5~0.75 미만), 소멸선제대응지역(0.75~1.0미만), 소멸예방지역(1.0~1.25 미만), 소멸안심지역(1.25~1.50 미만), 소멸무관지역(1.50 이상)이다. 이 중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된 소멸우려지역과 소멸위험지역은 각각 50곳, 9곳이다. 소멸위기지역의 59곳 대부분이 전남과 강원, 경북에 몰려 있었다.

전남은 13곳(22.0%)으로, 강원과 경북이 각각 10곳(16.9%), 9곳(15.3%)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특히 신안(0.088)과 구례(0.486)는 소멸위험지역 9곳에 포함됐으며, 그 중 신안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소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우려지역에는 완도(0.541), 함평(0.561), 곡성(0.566), 영광(0.635), 영암(0.642), 보성(0.644), 진도(0.652), 강진(0.664), 해남(0.668), 고흥(0.675), 장흥(0.708) 등 전남 11곳이 포함됐다.

소멸선제대응지역에는 장성(0.822), 담양(0.828), 무안(0.861), 광양(0.868), 목포(0.927), 여수(0.949), 나주(0.984) 등의 시·군·구가 이름을 올려 전남 대비 지역이 지방

소멸위험에서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순천(1.142)과 화순(1.159)은 소멸안심지역으로 분류돼 지방소멸 위험도에서 비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남구(1.064), 서구(1.094)가 소멸예방지역에, 북구(1.178)와 동구(1.232), 광산구(1.239)는 소멸안심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소득, 고용, 인구의 수도권 유출현상이 비수도권의 경기침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가 성장 정책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에는 비수도권 경제성장률이 수도권에 웃돌았으나 이후 역전되면서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6~2020년간 수도권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1.0%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팔라지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단계별 기업 입지 인센티브 차등화 ▲특화(주력) 전후방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담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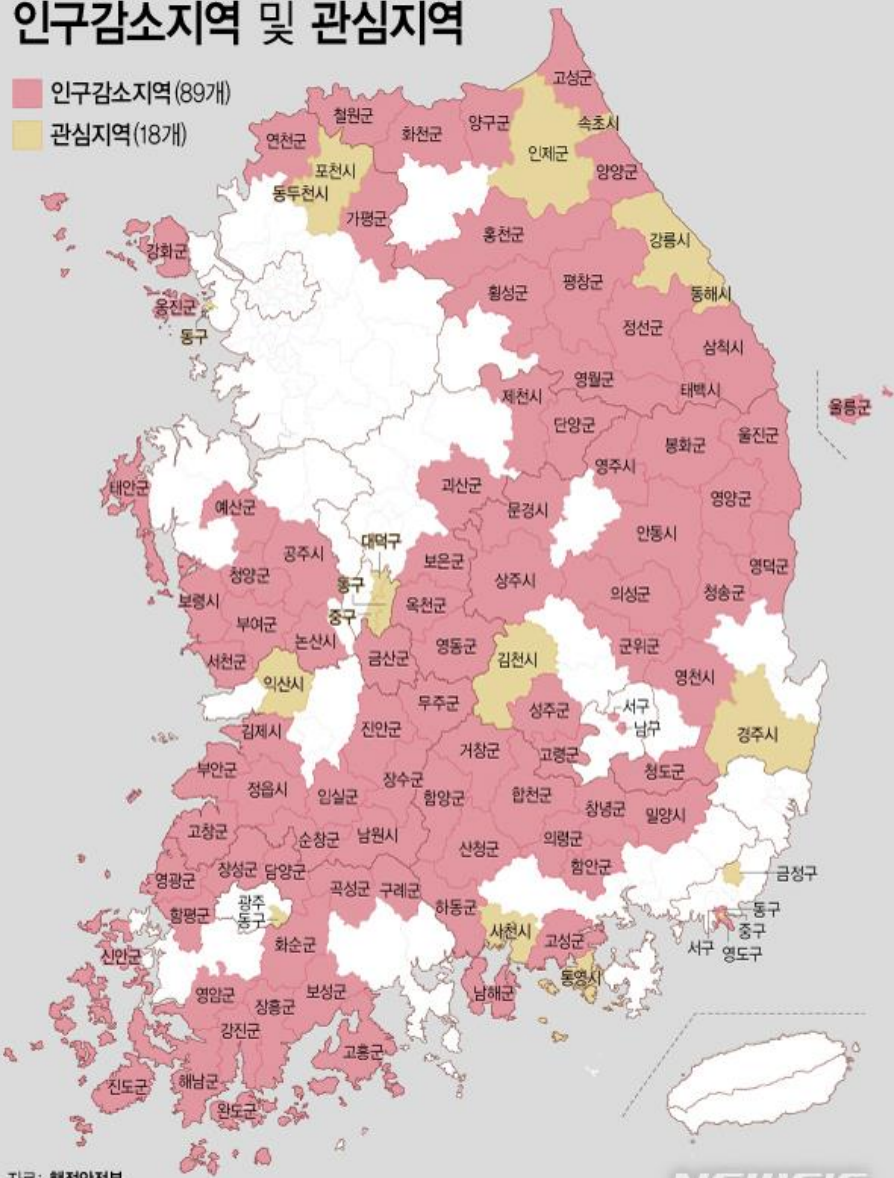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은 만성적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기존의 기업 입지 인센티브를 넘어 K-지방소멸지수에 기반한 단계별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것

소멸위험지역(0.5 미만, 9개 지역)							
지역명	지수	지역명	지수	지역명	지수	지역명	지수
전남 신안군	0.088	경남 의령군	0.441	경북 청송군	0.473		
인천 옹진군	0.161	경북 봉화군	0.451	경북 영양군	0.473		
경북 울릉군	0.328	강원 고성군	0.468	전남 구례군	0.486		
소멸우려지역(0.5~0.75 미만, 50개 지역)							
전북 장수군	0.516	경남 산청군	0.582	전남 영양군	0.642	경기 연천군	0.696
경남 하동군	0.522	경남 고성군	0.586	경남 보성군	0.644	강원 삼척시	0.697
울산 동구	0.537	전북 임실군	0.587	전남 완도군	0.652	경남 함양군	0.703
전북 무주군	0.540	충남 태안군	0.596	전남 장흥군	0.708	경남 통영시	0.716
전남 안동군	0.541	강원 정선군	0.606	경북 문성군	0.668	강원 태백시	0.719
부산 영도구	0.549	경남 남해군	0.606	전남 해남군	0.668	강원 영월군	0.716
경북 군위군	0.552	경남 밀양시	0.608	경북 칠곡군	0.668	강원 태백시	0.719
강원 화천군	0.558	경북 청도군	0.608	전북 부안군	0.669	강원 인제군	0.724
전북 순창군	0.559	강원 평창군	0.628	경북 보은군	0.673	강원 양양군	0.741
전남 함평군	0.561	경북 영덕군	0.631	전남 고흥군	0.675	충남 서천군	0.745
전남 함평군	0.561	전남 영광군	0.635	경북 의성군	0.678	인천 강화군	0.749
전남 곡성군	0.566	부산 서구	0.636	충북 영동군	0.684		
전북 진안군	0.576	강원 양구군	0.640	경기 가평군	0.687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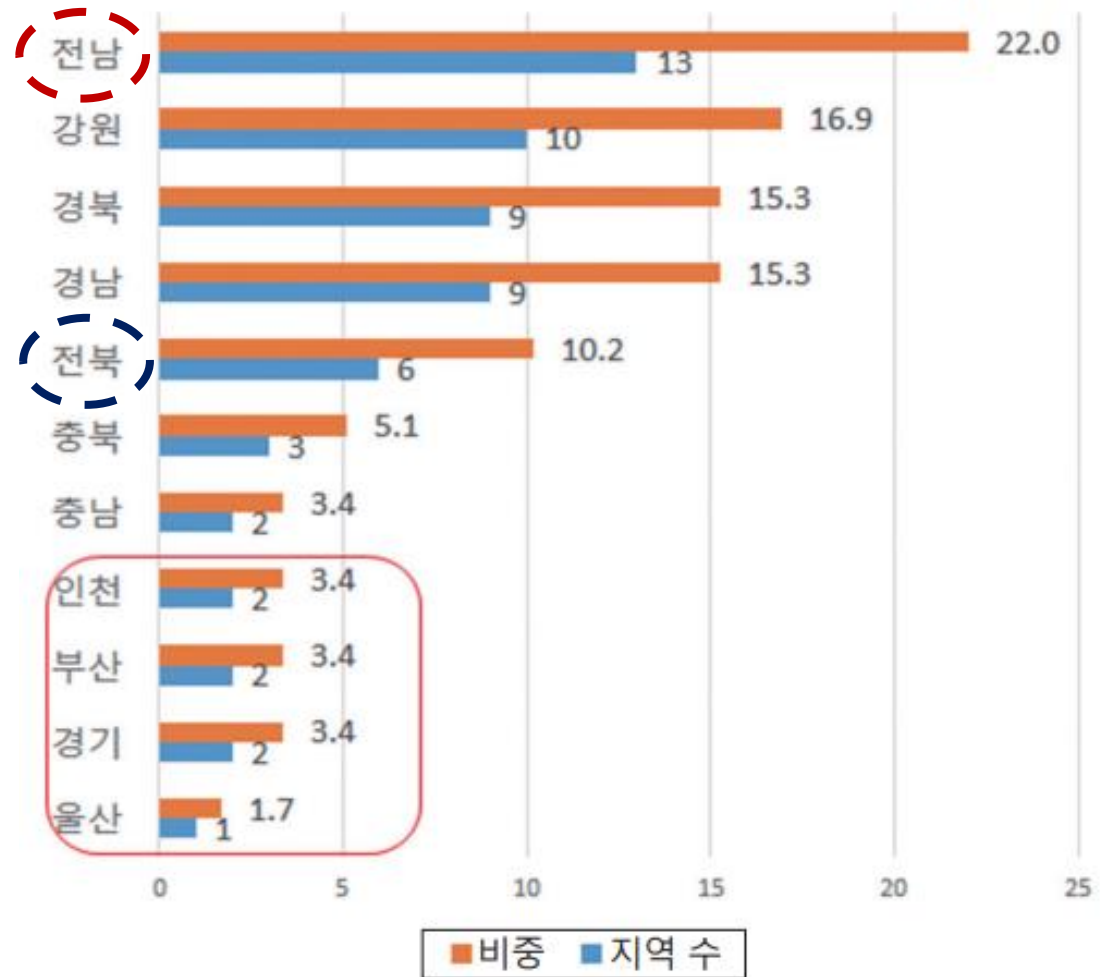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NEW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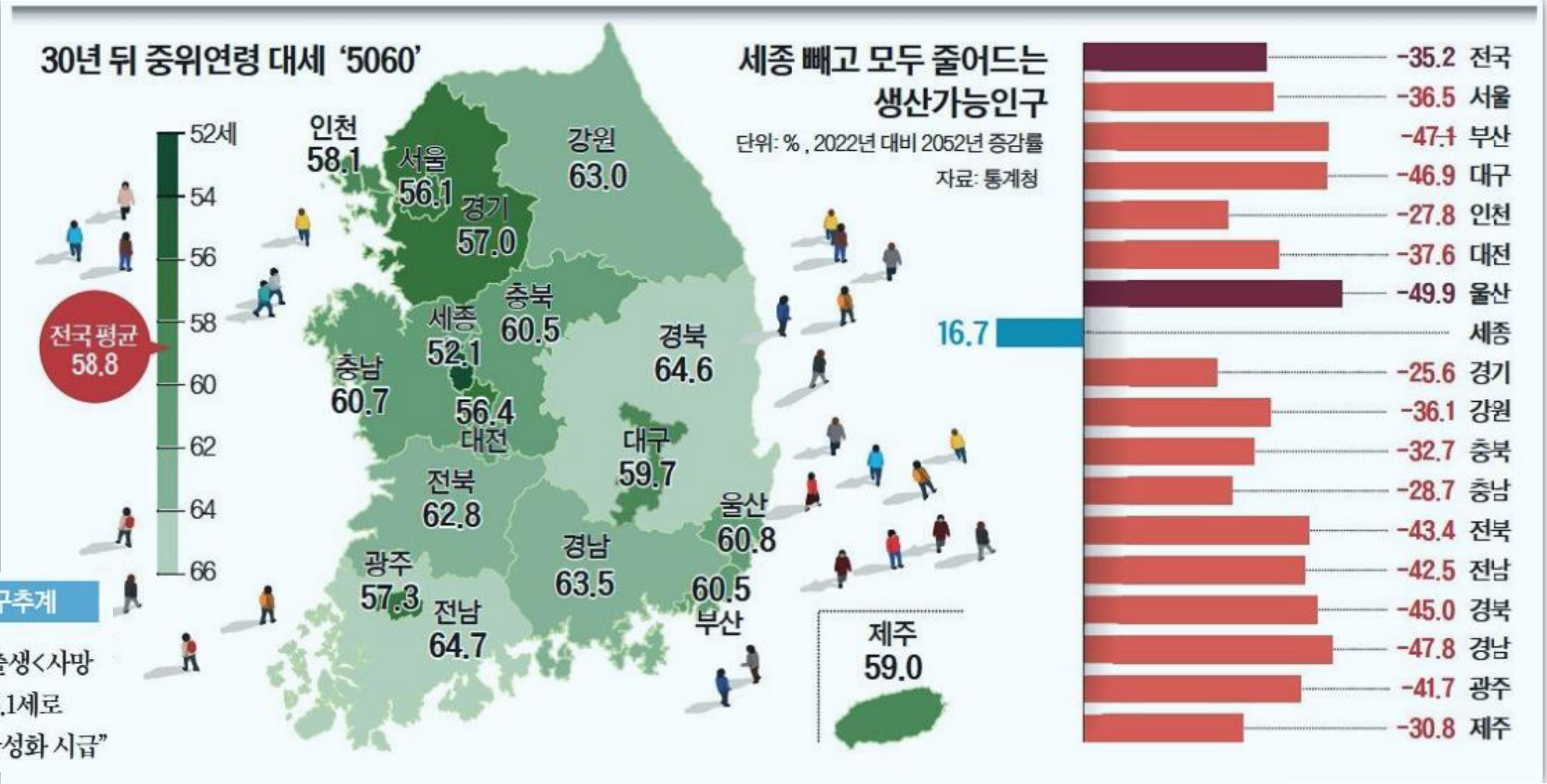
22.08.16 전진우 그래픽 기자 618lue@newsis.com

K-지방소멸 위기지역(59개)

단위: 개, %



30년 뒤 인구 4627만명 ... 세종·경기 빼고 모든 시도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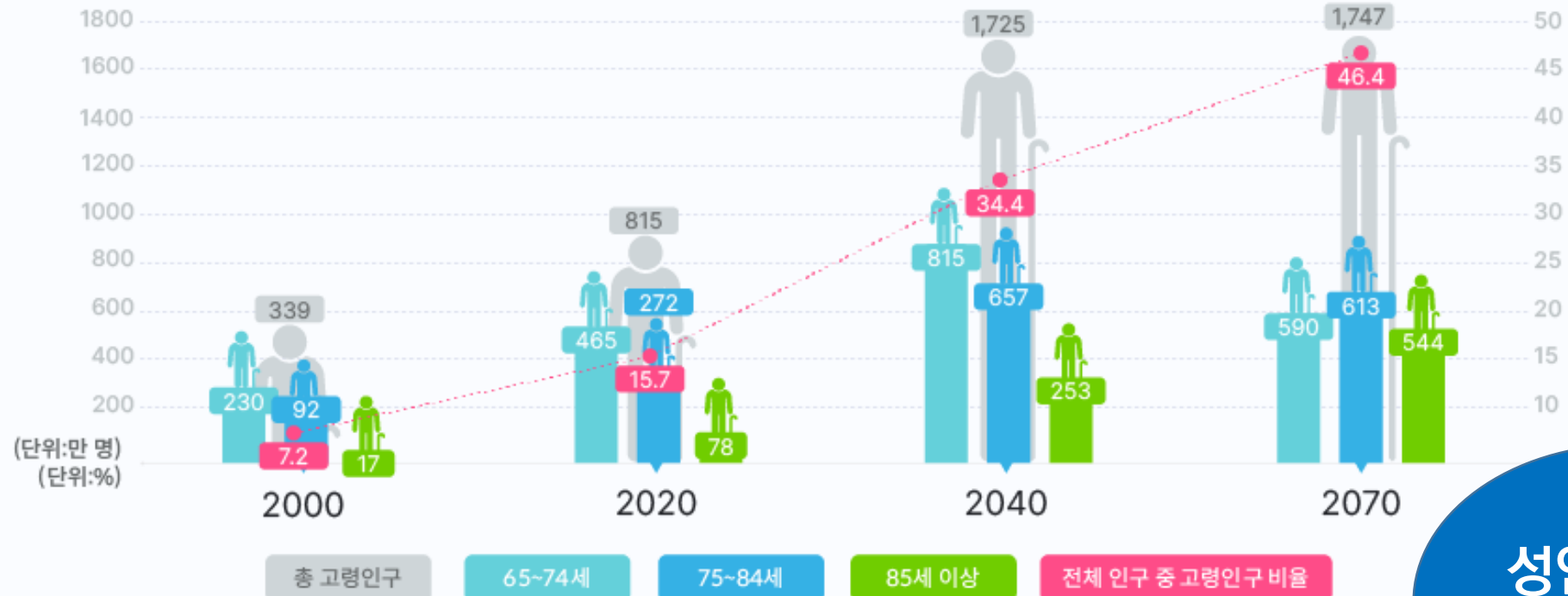


2022~2052 시도별 인구추계

21년 뒤엔 모든 시도서 출생<사망
서울 중위연령 43.8→56.1세로
“생활인구 늘리는 지역 활성화 시급”

고령화

고령인구



- 2020년 만 64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전체인구의 34.4%, 2070년에는 46.4%에 이를 것으로 전망

성인학습자
인구 증가

4.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I

-교육정책 변화의 추이-

5.31교육개혁(1995) 고등교육 정책

- ▲대학설립준칙주의
- ▲대학정원 자율화
- ▲단설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설치
-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의 연계강화
- ▲학부제
- ▲국립대 법인화
- ▲전문대학원

교육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전인교육이라는 개인적 차원보다는 국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국가경쟁력을 개인의 가치실현보다 우선하였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주도교육이었다.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 **취업률 지상주의**

통합 추세로 바뀌는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일반대학)



※ 2025년부터 RIS, LINC3.0, LIFE, HiVE, 지방대학활성화사업 등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통합 예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지자체, 대학,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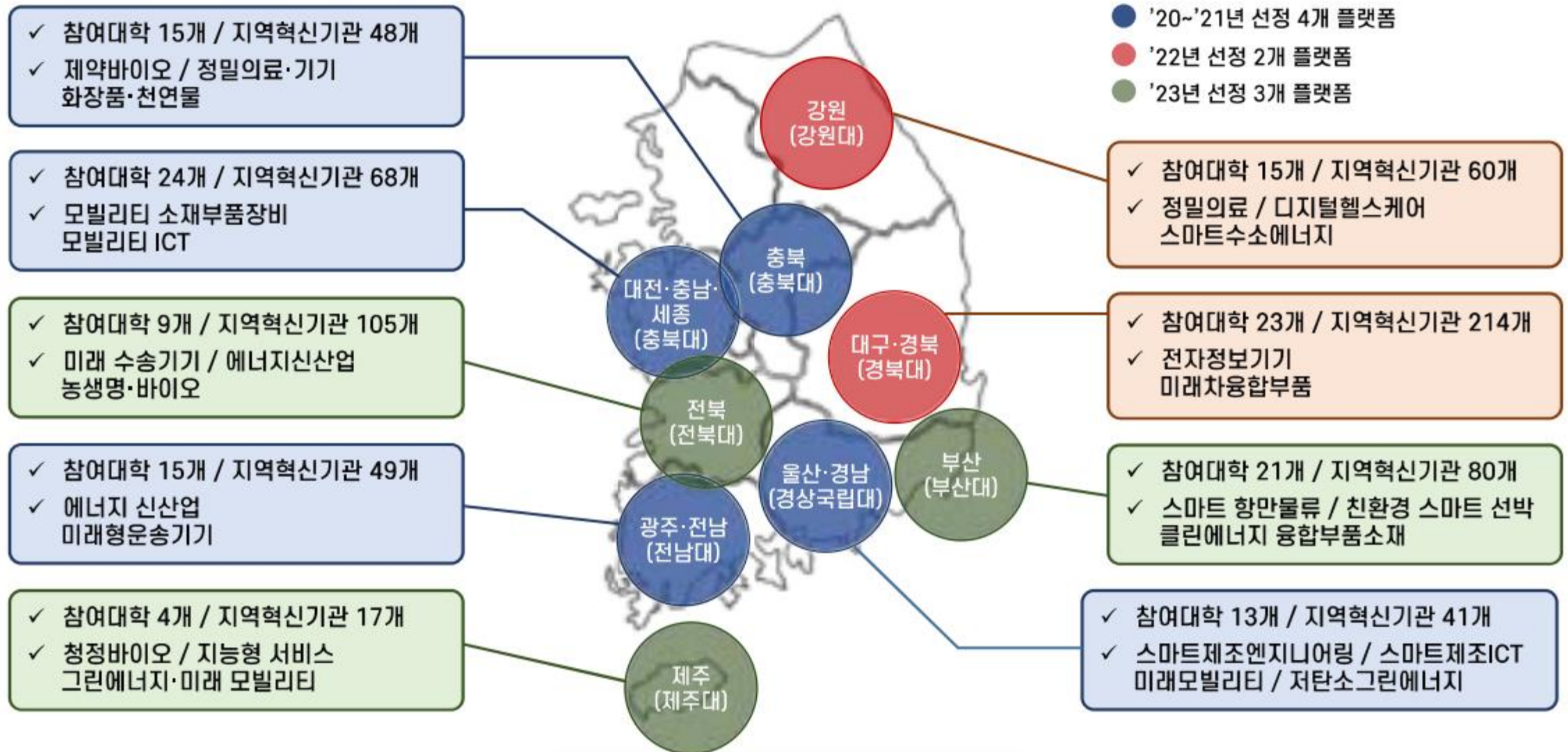


“지방위기·인구감소 위기”...
교육부, RIS 앞세워 정면돌파

RIS 사업 구축의 필요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들이 각각의 강점을 결집하고 역할을 분담해 함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역량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 구축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2023년 현재)



‘RIS ⇒ RISE’ 주요 변화사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RIS)

[사업 기획] ✓ 대학 주도

[재원 배분] ✓ 총괄·중심대학 → 대학·참여기관

[사업 수행] ✓ 참여대학, 지역혁신기관

[사업 평가] ✓ 교육부 주관 평가

RIS 사업의 한계점

- ✓ 대학과 지역의 연결고리인 **지자체의 관심과 권한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역할 수행 한계
- ✓ 사업비 집행구조가 복잡하고, 집행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학 외 기업, TP 등 지역혁신기관의 참여 어려움**
- ✓ 핵심성과지표가 투입·과정 지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역혁신 정도 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부족**

**지자체 중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 기획] ✓ 지자체 주도
✓ 중앙·지방 공동 설계·조정

[재원 배분] ✓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 → 대학

[사업 수행] ✓ 참여대학, 지역혁신기관

[사업 평가] ✓ 지자체 참여 평가

RISE 체계로 변화

- ✓ 지역혁신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 확대**
- ✓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자체 지역인재 양성 체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 재량권 부여 및 자율과제 비율 확대**
- ✓ 선(先) 재정지원 후(後) 성과관리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책무성 제고**

‘관 주도 대학체제’의 부작용

비판적 시각 1

- ‘NURI·CORE·PRIME’ 등 신약은 약효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했다
- 약간의 약효를 인정받은 ‘ACE’, 유일하게 20년째 장기 복용 중인 ‘BK21’을 제외하면 임상 실험조차 아까운 부실한 정책이었다.
- 이번에 떠들썩하게 들고 나온 ‘RISE·GLOCAL’이란 약도 사실 ‘RIS·WCU’의 포장만 그럴 듯 하게 바꾼 것이다.

출처 : 유원준, [대학지원체계 원칙을 제안한다...어떻게 주고 어디에 쓰게 할까?], 2023.05.16, 교수신문

비판적 시각 2

- 현재 지역상황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여 ‘인재양성→지역정착→산업발전’의 선순환구조가 깨진 지 오래다.
- RISE를 통해 지역대학 위기가 해소되고,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도 ‘장밋빛 환상’이다.
- 결국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육성의 큰 그림은 국립대학을 시·도립화하고, 지역 대학 재정지원을 지자체에 넘김으로써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 더 이상 지방대학 위기 책임은 정부 몫이 아니라는 의미다.

출처 :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 대학교육연구소, 2023.02.06

그래도 그 틀 안에서 생존전략을 짜야 ...

5.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II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국정과제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
-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

□ 기대효과

-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 전환
-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 주요내용

- **(대학규제 혁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
 -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체계 마련
-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 지원
 - 학생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 체계를 확산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 기술발굴 → 고도화 → 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
-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 과제목표

-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강화

□ 기대효과

-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
- 산업 전환기에,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 및 신기술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설치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23~)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확산**
-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 운영,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26년, 17개)
-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 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23년) 및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추진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트랙 마련

3부



RISE 사업과
평생교육 차원의
대응

1.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지역대학 위기

지자체 생태계 붕괴

대학과 지자체, 공동운명체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 대학의 위기를 평생교육으로 보완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본 사업이 대학 유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평생교육 그 자체를 위한 기관으로 체제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성인학습자가 입학 자원에 대한 대체효과**를 가져야 한다.
- 즉 미충원으로 인한 등록금 감소분을 메워줘야 한다.
- 지역 내 성인학습자가 대학 입학자원으로 흡수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 이를 위해 **성인학습자 충원을 위한 평생교육원 또는 지역의 평생학습기관이 다리 역할을 해야 ...**
- 이를 위해 **개방형고등교육체제 구축** 필요
- **대학 본연의 고등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식의 대전환

-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필요 –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
- 인적자원 고도화 : 인적자원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미래지향적 혁신인재의 양성
-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기능 강조
-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을 대학/전문대학에서만 감당할 수는 없다. 그 전단계 또는 틈새 직업 등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필요 :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연계**

***RISE사업에서 평생교육의 역할과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

- 대학과 지자체가 평생교육을 매개로 협력하여 대학도 살고 지방도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 대학들이 평생교육의 취지를 이해하고 평생교육도 살리면서 대학을 평생교육 체제로 체질 개선해 나가고, 지자체도 대학의 위기를 지방의 위기로 공감한다면 대학-지자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입학자원으로

➔ **어떻게?**

학령기학생

유학생

성인학습자

입학자원의 구성

① 학부교육, ② 대학원 교육, ③ **평생/계속교육(계속전문교육)**의 삼각틀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학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축

글로벌 지식 경제의 기술고도화가 고등 지식의 경쟁적 습득과 고등 수준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급격히 부각

하지만 전통적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고등교육체제로는 그런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없다.

- 서구의 대학들은 대학개방체제를 통해 지역민, 전국민, 세계민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 대학평생학습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지향해오고 있다.
- 또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비학위과정 및 성인학습자 유입은 하나의 대세가 되었다.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의 조건

대학 내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 및 협력 추진

- **학령기 고등교육체제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체제의 융합된 평생교육혁신체제 구축**
- 학령기-성인학습자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윈-윈 컨설팅

대학·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대전환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지역사회대학) 연계**

- 일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란 의미의 직업교육은 준비교육, 재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이란 관점에서 재구성/ '일하는 삶'의 의미에서 재구성된 교육이 평생직업교육
- 비학위과정을 편입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도입
- 생애주기별 개인의 경쟁력과 고용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경력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직업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기초지자체-전문대학 연계 고등직업교육 거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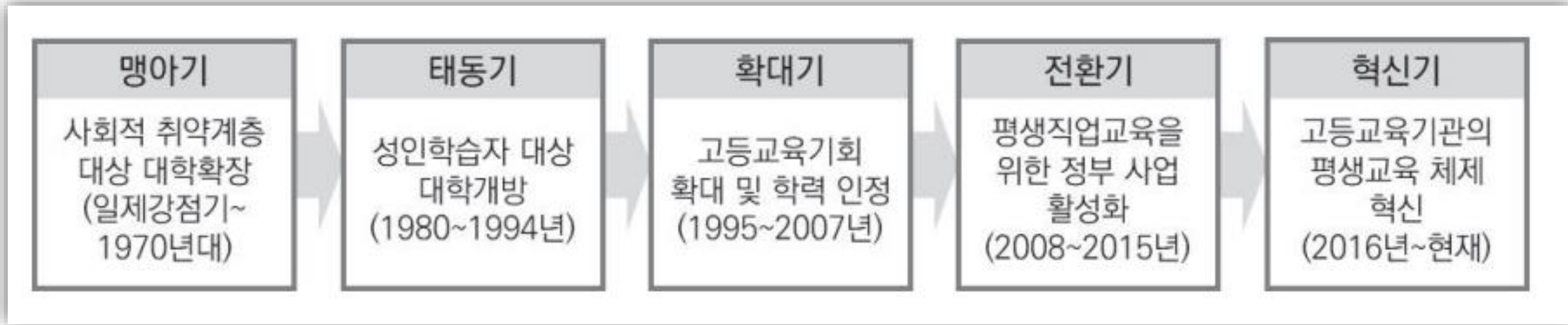
새로운 모습의 고등교육체제는?

- 생애 중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고등지식 학습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 그래서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은 평생교육의 이념 하에 모든 국민들의 지속적인 고등 지식 및 기술 학습이 전생애(lifelong), 전공간(lifewide)에서 걸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한다.
- 이것이 **개방형 고등교육체제 또는 고등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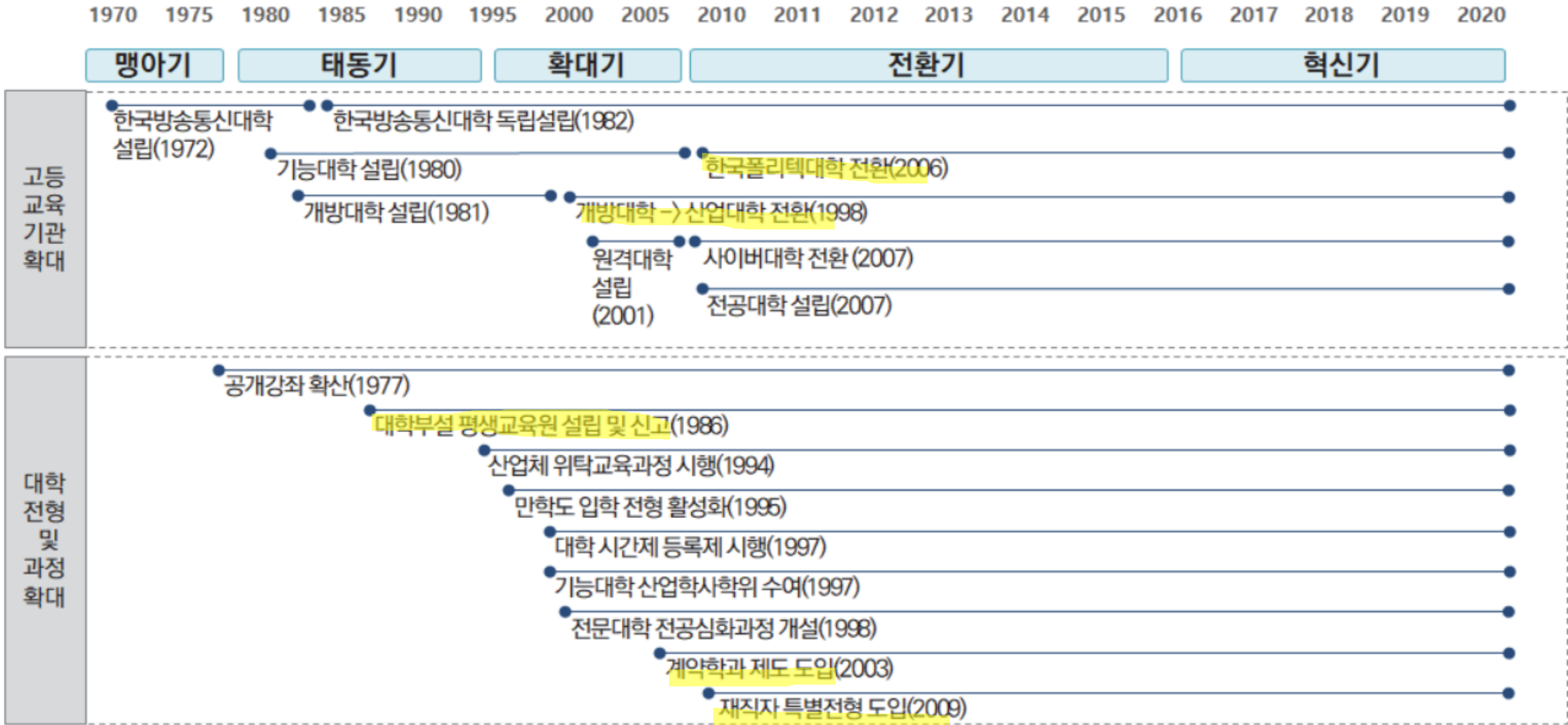
대학입학 전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성인학습자들을 일반 대학에 입학시켜 '성인친화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LIFE 사업**은 이런 시대적 필요성과 국민적 욕구에 따른 근본적 혁신의 하나이다.

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대학 평생교육의 변천 과정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변천 과정



0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맹아기 태동기 확대기 전환기 혁신기

대안적
학위
과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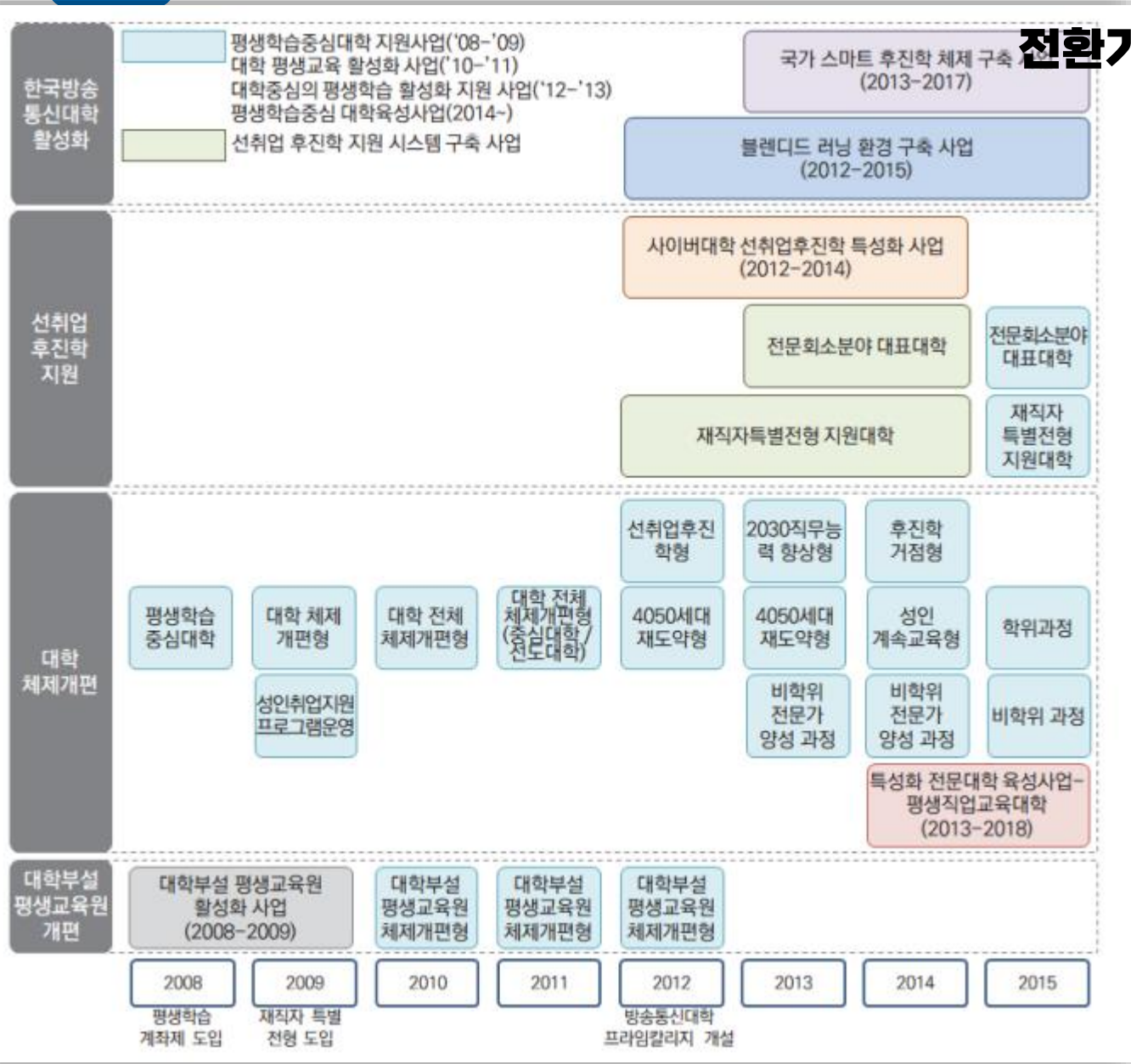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최동선·김남희·류지은·이상훈·임 언·안현용·임정훈,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기본연구 2021-0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97쪽

0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전환기 및 혁신기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최동선·김남희·류지은·이상훈·임 언·안현용·임정훈,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기본연구 2021-0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90쪽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역할 확대

-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의 환경 변화는 국가 교육체계, 특히 **평생직업교육의 실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무엇보다 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와 지식 창출 역할을 토대로, 그리고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관점에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의 의미는 중요해지고 있다.**
- **직업능력 향상교육 또는 직업·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사업 또는 선취업-후진학 등의 특정 정책에 국한된 최근의 논의를 확장하여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의 융합·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논의의 두 방향

- ① '평생'에 걸친 직업교육이 전개되어야 하고 그 일부를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이 담당
- ②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등의 비전통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요에 필요한 교육활동의 제공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

- ❖ 의미 :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일부로서 고등교육기관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성장 및 직업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적·비형식적 학습이라 해석
- ❖ 내용 : 직무수행을 위한 지식 및 역량의 향상(up-skilling), 새로운 진로개척을 위한 직무능력개발 (re-skilling/retraining),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등을 포함
- ❖ 기반 : 지역사회 또는 산업계와의 연계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내·외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확대 강조

UNESCO(2020). 학교와 대학의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을 강조
* 평생학습 문화의 수용(UIL, 2020).



6.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

**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1 ~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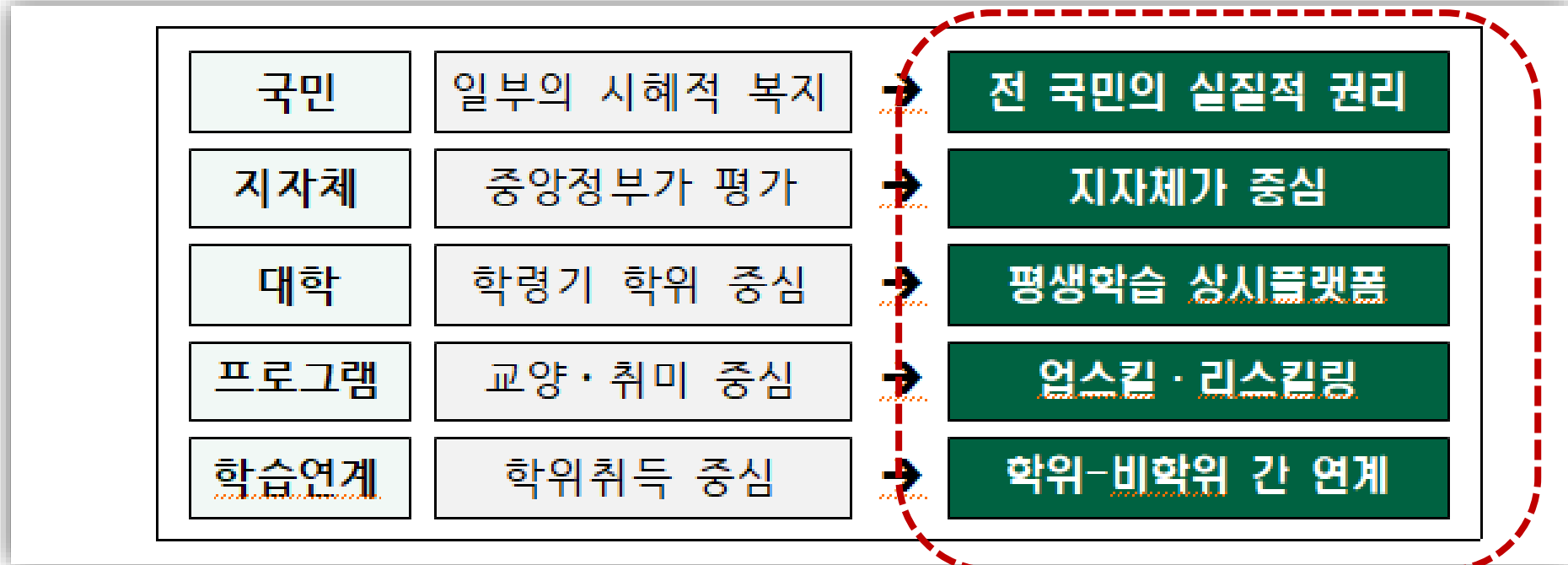
종합 계획	정책 영역
제1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2~2006)	평생학습의 생활화 및 지역화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의 지원 강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성인교육 기회의 확대 직업교육의 확대를 위한 일터의 학습 조직화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
제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8~2012)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의 육성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의 참여와 연계 확대 평생학습의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	대학중심의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의 종합 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의 지원 지역사회 학습 역량 강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국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실현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실현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실현 기반이 튼튼한 질 높은 평생학습 실현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교육부) - **패러다임 전환**

[평생학습진흥의 기본방향]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를 시대적 요구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평생학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



평생교육진흥 추진체계도

비전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 정책 목표**
-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
 -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
 -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

- 3대 키워드**
- | | | |
|--------------|-----------------|----------------|
| 지속가능성 | 기회 | 연계 |
| • 국민의 계속 성장 | • 실질적인 기회 확대 | • 다양한 학습경험 연계 |
| • 정책의 지속 고도화 | • 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 | • 국가-지자체-민간 연계 |

6대
핵심
과제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환경”

2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3 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

4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

5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

6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뒷받침
과제

거버넌스
법정부 협력 강화

데이터
데이터 기반 정책

재정
안정적 자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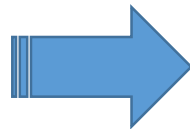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 대학교육체계를 성인학습자까지 확대하여, **평생학습 거점=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기능과 역할 강화
- 지속적인 역량향상을 위해 **대학을 통한 재교육·향상교육(re-skilling and up-skilling)**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음/ *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 : 78.9%(직능연 '22년)
- 대학 교육환경은 **학령기 중심, 학위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접근하기 어려움**/ * 대학 등 정규과정 평생교육참여율 : 0.8%(총 참여율 30.7% 中)(교육부, '21년)

➤ 성인의 여건을 고려한 비학위과정 확대, 성인 맞춤형 학위과정 개설, 성인 친화적 교육환경 마련 등 필요

지금까지

- 대상·교육내용 | 학령기 학생 중심
- 교육과정 | 경직적인 2·4년 학위과정
- 학위취득 | 단선적인 학위취득 경로



앞으로

- 대상·교육내용 | 성인 맞춤형 교육까지 확대
- 교육과정 |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과정
- 학위취득 | 유연한 조합·누적형 학위 취득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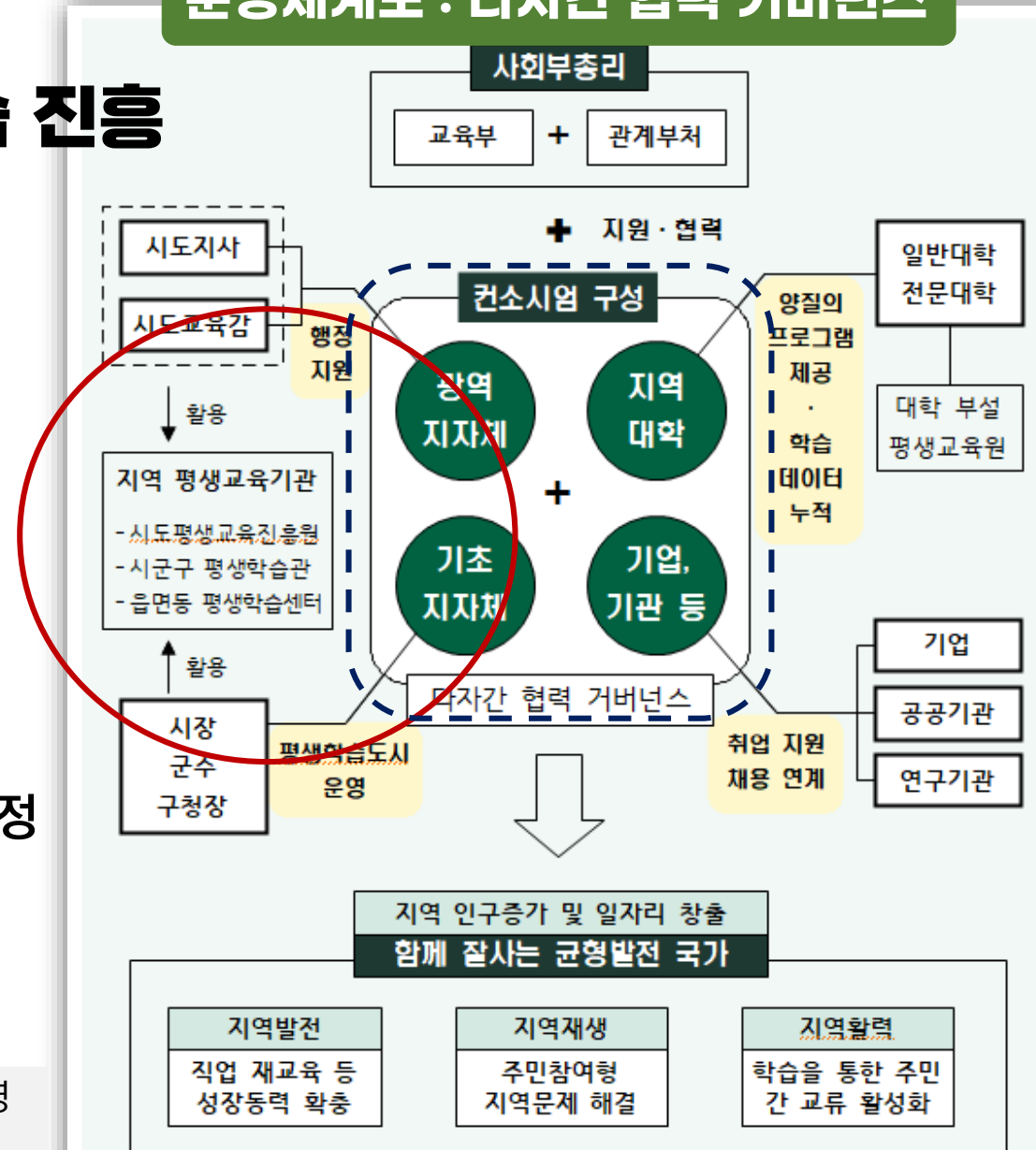
방향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 지역기업,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 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을 위한 규제혁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 대학 연계 평생교육체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
- 대학 연계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사업의 체계화, 총괄 조정
- **대학 연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 지역대학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운영 방안 연구』, 2021.10. 참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대학 연계 평생교육 체계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한 지자체 평생학습기관들의 프로그램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
- ‘서울자유시민대학’이나 ‘대전시민대학’,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시민대학’ 등 여러 곳에서 시험적인 사업들을 진행
- 서울이나 대전은 대학이란 이름을 붙여 운영하고 명예시민학위를 수여하기도 하지만 실제 대학교와는 직접 연관이 없음
- 인천시민대학은 이와 달리 대학교에 직접 예산을 주고, 대학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등 새로운 시도
- 인문교육을 넘어 평생직업교육 중점으로 재편 –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성인학습자들의 참여 증진을 위해 교육비 지원이나 유급학습휴가제도, 기초학습보완 프로그램 등을 구비

대학입학자원 선발의 유연화 – 평생교육기관과 대학 연계

- ‘개방입학-경쟁졸업’이라는 틀을 활용, 성인학습자의 입학은 단계적으로 구성
- 예를 들면 먼저 일반 평생교육기관(대학 또는 지자체)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중 일정한 성과를 이룬 학습자를 대상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 기왕의 학습성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
- 이른바 ‘예비대학’ 형식으로 별도의 기구(대학의 평생교육원 또는 인증된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에 입학 시켜서 일정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과에 진입시키는 장치가 필요.
- 하버드대학교 개방대학(extension college)은 자체 프로그램 이수성적에 따라 정식 입학 여부를 판단.

성인교육기관(시·도평진원을 비롯한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들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연하게 연계된 평생교육을 추진

대학 외 성인교육기관 → 열린대학=대학평생교육(개방형 고등교육체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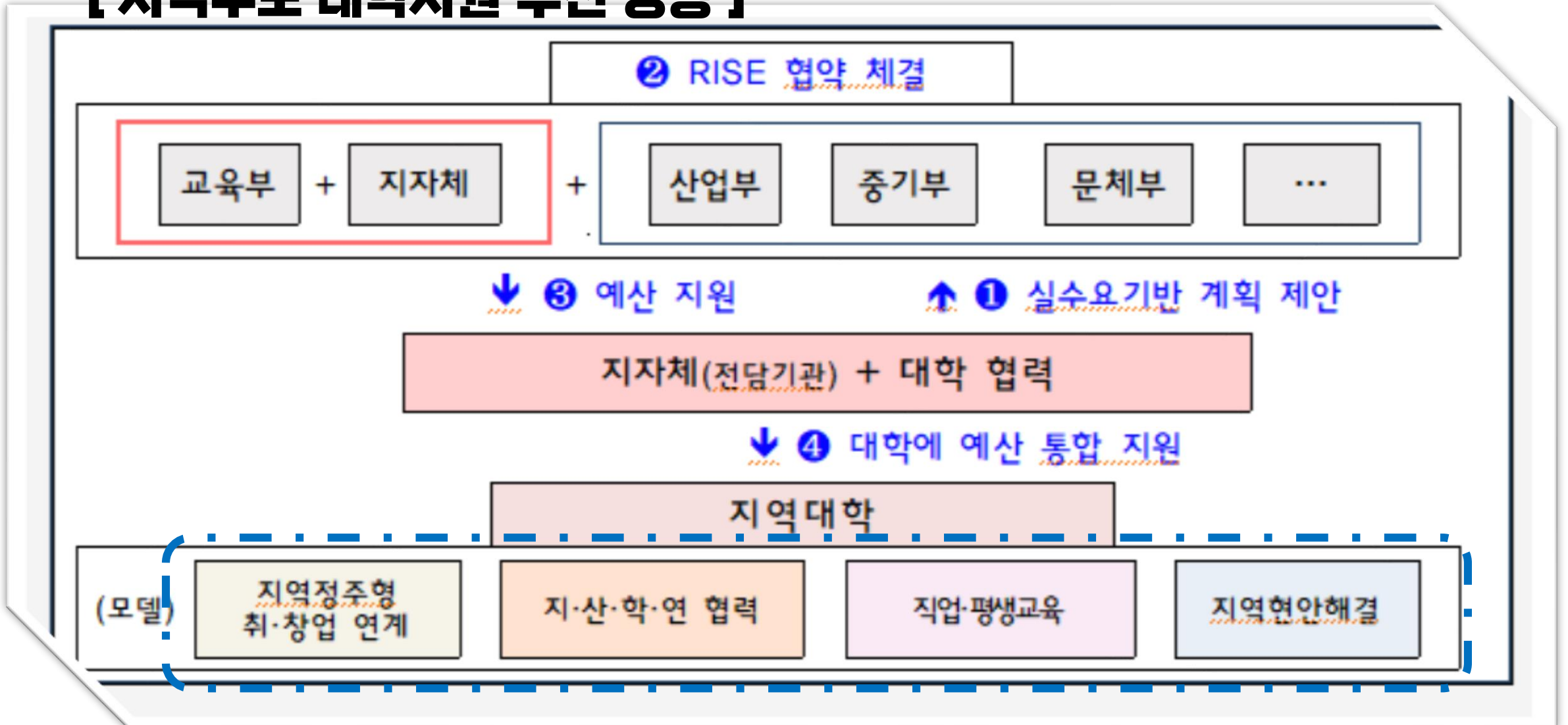
**RISE사업에서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의
몫을 키워야 한다.**

-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참조 - **Learncation : 학습휴가**)
-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 확대

4. RISE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교육부 RISE 안내서-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04 RISE 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 교육부 RISE 안내서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운영 체계 및 사업 안내서(ver 2.0), 2023. 12. , 교육부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운영 체계 및 사업 안내서(ver 2.0), 2023. 12., 교육부

< 자율 성과지표 예시 >

3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대상 :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대상



내용 : 성인친화·직업교육

③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 ① 성인학습자 신입생 총원율
- ② 성인학습자 장학금 지원 실적
- ③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수
- ④ 재직자 교육과정 이수자수
- ⑤ 성인학습자 정원 확보율
- ⑥ 성인학습자 중도탈락률
- ⑦ 성인친화적 교육과정을 통한 인력배출 실적
- ⑧ 직업교육심화과정 이수율
- ⑨ 특화분야 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성과
- ⑩ DX 교육과정 이수율
- ⑪ DX 소단위 학위과정 취득률
- ⑫ DX 교육과정 취·창업률
- ⑬ DX 직무 전환·확대 추진율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운영 체계 및 사업 안내서(ver 2.0), 2023. 12., 교육부

3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성과목표③]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 단위과제명

- | | |
|-----------------|---------------------------|
| 1. 한국형 이원 직업교육 | 7.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고도화 |
| 2. 신중장년 직업전환교육 | 8. 채용약정형 주문식 성인학습자교육 |
| 3.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 | 9. 지역 평생학습 경력·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
| 4. 선취업 후진학 지원 | 10. 평생직업교육 앵커대학 육성 |
| 5. 시민대학 운영지원 | 11. <u>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u> |
| 6. 지역사회 협력 평생교육 | 12.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 |

대학 자체사업 : 1,2,3,4,9

대학-지자체 협력사업 : 5,6,7,8,10,11,12

11.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

- (주요내용) 지역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이 직업(이. 전직, 재교육등) 인문사회 영역(지역애착, 정주인재)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제공
 - (기반조성형) 시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실생활에 도움되는 교육을 촘촘하게 제공, 지속적인 학습 참여 촉진
 - * 청소년(진로,적성교육)→청년(자산설계, 결혼, 육아)→중장년(기업체 맞춤형 기술교육)→노년(시니어 건강)
 - (스마트시민 육성형) 지역 현안이슈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창의적 사회혁신 플랫폼 구성하고 시민역량 향상
 - * 대학.지자체 등이 지역 해결이슈 발굴하면, 시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퍼실리테이터 지원을 받아 솔루션 제시
 - (지역문제 해결형) 지역의 인구 감소 구성 변화, 산업구조 변동, 지역간 불균형 지역소멸 문제 완화 해소
 - * 교육공동체 조성형, 로컬 창업가육성형, 선배시민 활력형
- (성과목표) 평생학습 진흥지구 조성 1건

□ 지역-지역대학간 연계 전략

예시3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범사업 추진(안) - 프로젝트③

1. 추진 배경

□ 광역 지자체의 역할 부족

- 기존 지역평생교육 사업*은 기초 지자체 중심의 사업으로서, 광역 지자체가 평생학습의 주요 수행 주체로서 제외되는 문제

* 평생학습도시(시·군·구) 신규 지정 및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 지역 평생교육의 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 중심의 평생학습 진흥 체계 필요

□ 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조

-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이 학령기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

* 학령인구(만18세) 추이 : 82만명('00) → 65만명('10) → 45만명('24) (교육부, 21년)

※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이 평생 학습의 지역허브로 기능해야"(유네스코 세계교육협의회, 2022)

- 특히, RISE 체계 하에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평생·직업교육 허브로서의 대학 역할 강화 필요

□ 지역 소멸에 대응한 평생학습 중요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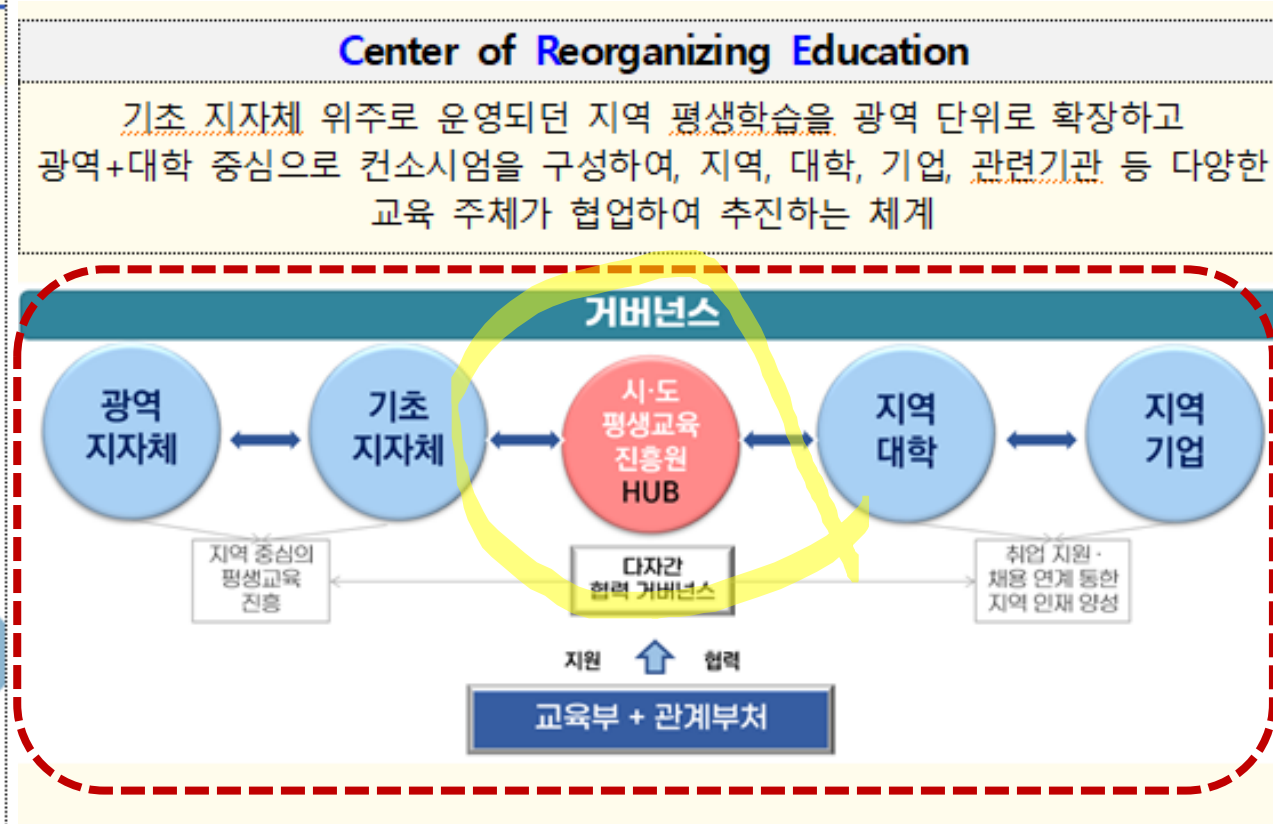
- 지역소멸 위기와 고령화 사회 대응, 지역 정주의식 제고 및 지역 생태계 역동성 부여를 위한 지역 평생교육의 필요성 확산

※ 지역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평생교육 역할 강조(세계평생학습포럼, 2018)

중앙부처·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 각종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기획하고, 대학·평생교육기관 등이 연계 협력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모델 설계 필요

예시3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범사업 추진(안) - 프로젝트③

II. 중점 추진 방향



예시3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범사업 추진(안) - 프로젝트③

III. 사업 추진 계획

□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개요

- (목적) 지역 평생교육사업의 종합적 연계·집중 지원으로 재원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지역 현안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소멸 완화
- (지원규모) RISE 사업 예산액에 따름

□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주요 추진 계획

- (기본방향) 지역사회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이 지자체 평생교육 기관기업 등과 함께 직업(아전직, 재교육 등) 영역이나 인문사회 영역(지역 애착시만정주인재 양성 목적 등)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제공

* 지역별 지역균형발전 계획, 도시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 (주체별 주요 역할)

기관	역할
교육부	집중 투자 대상 사업 발굴 및 사업별 연계 방안 마련 ※ 교육부 사업 중심으로 타부처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 추진 발굴
지자체 (광역)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사업 종합 계획 및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 ※ 진흥원(또는 RISE 센터)을 중심으로 조사분석, 연구수행, 정책수립 및 홍보, 정보제공 등 역할
지자체 (기초)	평생교육 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해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 (대학)	대학의 고등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 확장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산업체 (기업)	기업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형 일자리 영역과 평생교육의 연계를 통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예시3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범사업 추진(안) - 프로젝트③

○ (운영 유형)

- 컨소시엄형(1유형) : 각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여 역할 분담을 통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을 수행하는 유형

- 컨소시엄형(2유형) : 대학과 대학 밖의 자원(지자체 평생교육기관이나 기업 등)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유형

○ (운영 체계)

- (위원회)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설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지역 내 既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도 운영 가능)

※ RISE 사업 계획의 거버넌스를 표준모델로 따르되, 시·도지사, 대학 총장, 교육감 또는 기업 임원(대표), 공공기관 장 등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도 포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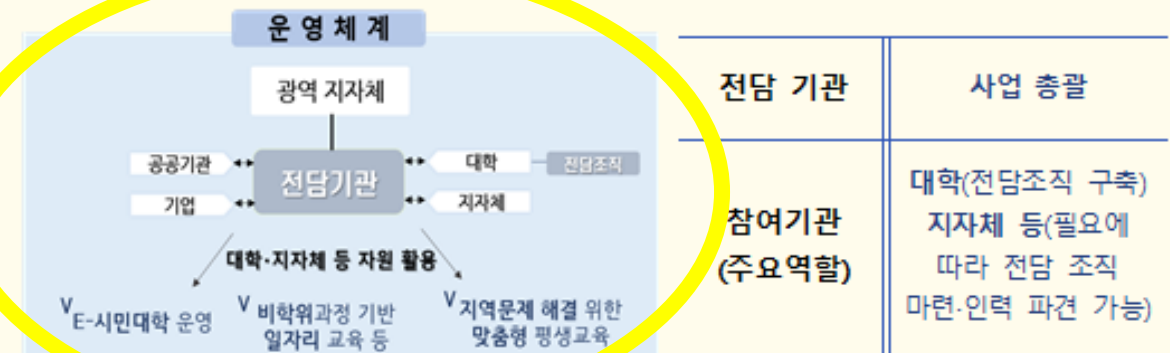
- (전담조직)

▶ (시·도) 시·도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구축*(사업 기획, 예산 집행 사항, 거버넌스 운영 사항 등 주요사항을 집행)

* 「평생교육법」상 시·도진흥원(유사 기관도 가능)이 전담기관으로 활동하되, 지자체 관계 전문가나 대학의 담당자 등도 참여 가능

▶ (대학) 대학 내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를 운영하는 전담조직 구축

※ 시·도 전담조직과 연계하여, 대학 내 평생학습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지정



5. 마무리 말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 효과적인 대학지원의 방향 및 방식 논의

-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로 대 전환**하는 시점
- 지역소멸이라는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선순환적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지역대학은** 지역 사회의 허브로서 교육·문화, 산업·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앵커기관**이다.
- 지역대가 무너지면 해당 지자체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만큼 **지역대 문제는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 이 과정에서 지자체-대학 간 상호 이해 부족 문제,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설계·운영 경험 부족 문제 등에 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혁신주체 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

- 지역혁신 주체 간 RISE 계획의 방향·과제 등에 관한 **원활한 소통 및 지속적 협상**의 기회가 민주적·개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지역 RISE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주체, RISE센터는 **서로 최대한 빈번히 만나고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 단연코 향후 **성공한 지역 RISE**는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 주체 간 가장 빈번하게 만나고 밀접하게 소통한 지역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Q&A